



2021

May 14th

인하대-한국외대 BK사업단
다문화교육·민주주의 공동학술대회

일시

2021년 5월 14일(금) 14:00-17:20

진행

비대면 웨비나 진행(ZOOM)

주최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BK21 글로벌민주주의와
인간안보연구팀, 인하대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교육학과

2021년 인하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BK사업단 다문화교육민주주의 공동학술대회

- 주제: 기로에 선 민주주의와 다문화 사회
- 일시: 2021년 5월 14일(금) 14:00 - 17:00
- 진행: 비대면 웨비나 진행(ZOOM)
- 주최: 한국외대 BK21 글로벌민주주의와 인간안보연구팀·정치외교학과,
인하대 BK21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다문화융합연구소·다문화교육학과
- 후원: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연구재단

Program

사회: 정다빈 간사(한국외대)

구분	시간	내용	발표자
개회	14:00~14:15	인사말	김영순 BK교육연구단장(인하대)
			이재목 BK연구팀장(한국외대)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BK21 글로벌 민주주의와 인간안보연구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14:15~14:45	기조강연 김영순 교수(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리터러시	
14:45~15:00	휴식		
주제 발표	15:00~15:50	세션 1: 기로에 선 민주주의 (사회: 한국외대 이기현 교수)	
	15:00~15:20	아시아 민주주의의 호(Arc of Democracy)와 중국의 도전	발표 권재범 박사(한국외대) 토론: 이진영 교수(전북대)
	15:20~15:40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가 권위주의 체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김소연 원생(한국외대) 토론: 문용일 교수(서울시립대)
	15:40~15:50	질의응답	
	15:50~16:00	휴식	
	16:00~17:00	세션 2: 기로에 선 다문화 사회 (사회: 인하대 오영섭 연구교수)	
	16:00~16:20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박지인 박사(인하대) 토론: 안진숙 교수(한양사이버대)
	16:20~16:40	언택트 시대,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표 개발	이민솔 원생(인하대) 토론: 허숙 교수(인하대)
16:4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폐회	17:00~17:20	총평 및 폐회	

2021

May 14th

목차
contents

**인하대-한국외대 BK사업단
다문화교육·민주주의 공동학술대회**

01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리터러시 1
김영순 |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

02

아시아 민주주의의 호(Arc of Democracy)와
중국의 도전 11
권재범 박사 | 한국외대

토론: 미국의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와 중국의 썬기전략
..... 30
이진영 교수 | 전북대

03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가 권위주의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31
김소연 원생 | 한국외대

토론: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가 권위주의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53
문용일 교수 | 서울시립대

04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56

박지인 박사 | 인하대

토론: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75

안진숙 교수 | 한양사이버대

05

언택트 시대,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표 개발

..... 77

이민솔 원생 | 인하대

토론: 언택트 시대,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표 개발

..... 89

허숙 교수 | 인하대

학문 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리터러시

김영순 소장(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한국외대 공동학술대회 기초강연

2021년 5월 14일 14시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

김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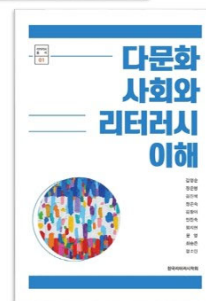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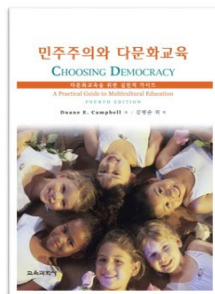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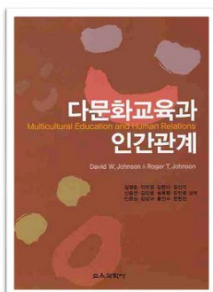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BK21 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인하대학교 부설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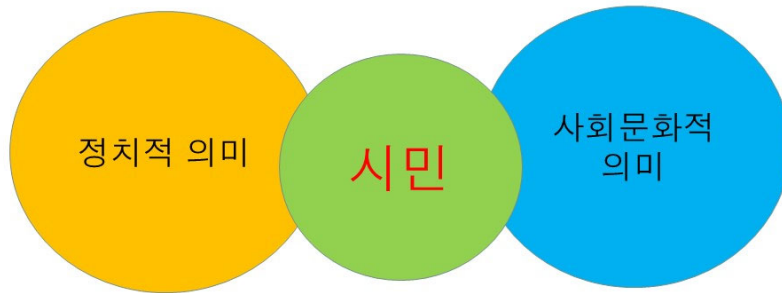
강연의 배경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2

시민의 개념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3

정치적 시민



	영국 혁명	미국 독립	프랑스 혁명
시기	1642-49년 청교도 혁명 1688년 명예혁명	1776년 독립 선언 1783년 파리 조약	1789년 바스티유 습격 1799년 통령 정부
왕 조	스튜어트 왕조	하노버 왕조	부르봉 왕조
국 왕	찰스 1세 · 제임스 2세	조지 3세	루이 16세
주 체	젠트리 · 요먼 · 부르주아	식민지 애국파	부르주아 · 소시민 · 빈농
성 격	권리 장전	독립 선언	인권 선언
외국과의 관계	없음 · 무간섭	프랑스 · 에스파냐 · 네덜란드 3국 지원 무장 중립 동맹	대프랑스 동맹으로 간섭 (혁명 확대의 두려움)
의 의	자본주의 기반의 형성	인민 주권 · 삼권 분립 · 프랑스 혁명에 영향	천부인권 · 왕정 폐지 · 봉건 신분 일소

전제 군주의 억압에서 저항하고, 인권 불평등을 극복한 주체로서 '시민'이라는 말을 사용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4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

- “시민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 이 물음은 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음.
-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답은 바로 ‘학문수행자로서의 시민’임.
- 학문수행자는 학문을 갈고닦는 ‘수행자’의 일종임.
- 수행자는 종교적 개념으로 ‘해당 종교의 교리를 좇아 삶을 살아가는 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인간이 세상에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
- 결국 시민은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며, 개인으로서 인간은 물론 인간과 다른 인간 간의 관계, 나아가 인간을 둘러싼 세계라 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상호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함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हा대 김영순 교수

5

리터러시 이해(1)

- 리터러시: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전통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으로서의 읽기와 쓰기로 정의되어 있음.
- 현대 사회에서 리터러시는 문맹 퇴치 운동의 차원에서 정의하기도 함. 리터러시를 문해력으로 이해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과 역량으로 보기도 함.
- 리터러시의 개념은 다양하며 학문 분과나 일상의 영역에서 적절하게 변용되었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수용해 그 의미를 지속해서 변화시켜 왔음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हा대 김영순 교수

6

리터러시 이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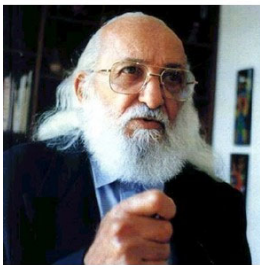
- 원래 리터러시의 의미는 언어, 숫자, 이미지, 컴퓨터 및 기타 기본 수단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임
- 유용한 지식을 얻고,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의 지배적인 상징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 시킴
- OECD 국가들에서는 리터러시에 관한 기술을 통해 지식에 접근하는 능력과 이에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함.
- 그렇지만 원래 리터러시는 문맹 퇴치라는 인간 존엄과 해방의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7

리터러시와 프락시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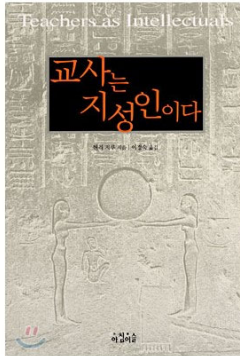


- 비판적 페다고지: 파울로 프레이리는 비판적 의식화와 실천이 연계된 프락시스를 통해 ‘해방’과 ‘변혁’을 지향하는 교육학적 기본 철학을 제시하였음
- 프락시스: 그리스어 ‘praxis(프락시스)’는 한국어로 ‘행위’ 혹은 ‘실천’이라고 번역됨.
- 성찰과 실천,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고와 행동의 총합으로 정의됨.
- 자신을 둘러싼 구조와 현실에 대한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면서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만듦.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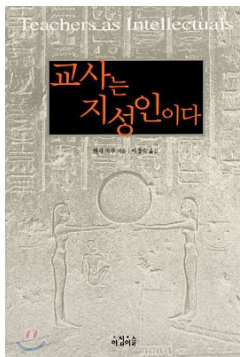
리터러시와 프락시스(2)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 헨리 지루의 경우 인간은 프락시스를 통하여 재현과 주체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함.
- 목적 지향적 행위는 프락시스이고 의지적 행위는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음.
- 리터러시는 이미 프락시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고 리터러시와 프락시스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리터러시와 프락시스(2)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 헨리 지루의 경우 인간은 프락시스를 통하여 재현과 주체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역사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함.
- 목적 지향적 행위는 프락시스이고 의지적 행위는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음.
- 리터러시는 이미 프락시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이고 리터러시와 프락시스가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학문수행자로서 시민 구상(2)

- 인간다움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사회문화적 의미의 시민, 즉 학문수행을 통한 진리로의 탐구일 것임
-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우선 개인 영역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됨
-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함으로써 우리는 ‘개인’ 이 될 수 있음.
- 우리가 언제 개인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 그런데도 ‘나’ 를 묻고, 개인을 근대 이후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 이런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과 같은 자기 인식과 자기 확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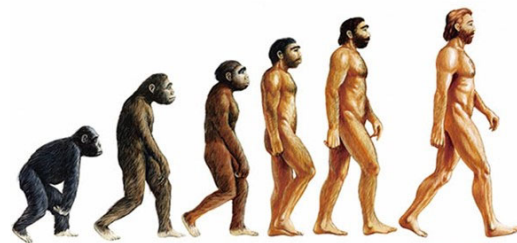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11

학문수행자로서 시민 구상(3)

- 근대 이전에 누구도 지금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자기 인식이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당시에는 인간은 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며 신학적 인간상에 몰두했었음. 즉 신의 형상대로 신이 규정해 교리에 충실하기 위한 삶을 살았음.
- ‘나’ 를 ‘개인’ 으로 확인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투쟁의 산물임.
- 실제로 근대 이전에 ‘나’ 에 대한 물음은 늘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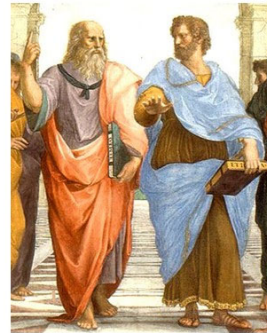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12

학문수행자로서 시민 구상(4)

- 이는 ‘~은 무엇인가?’는 정체성을 묻는 물음으로 환원될 수 있다, 플라톤 이래로 철학의 질문은 무엇의 ‘본질’을 묻는 것이었음.
- 이 물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것이며, 이 세계가 우연적이고 찰나적이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임.
- 그럴 경우 묻고 있는 본질이 영원하며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함.
-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은 본질에 의존해서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먼지와 같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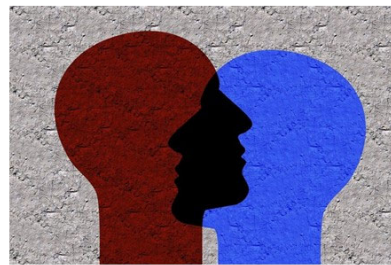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13

학문수행자로서 시민 구상(5)

-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되돌아보면, 살과 피를 가진 구체적인 인간은 하찮고 의미와 가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가 사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본질의 세계에 참여함으로써만 존재나 의미가 있게 된다고 봄.
- 구체적 인간도 인간의 ‘이념’ 이나 ‘본질’ 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본질이나 보편의 관점에서 보면 하찮고 가치 없는 것에 관한 물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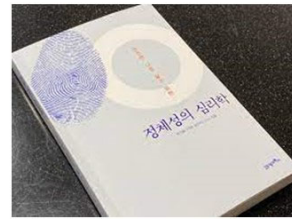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14

학문수행자로서 시민 구상(6)

-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은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것이 스스로 그 자신의 ‘우연적 존재’를 묻는 것이고, 또한 그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기도 함.
- 이 물음은 자신 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체험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삶이나 사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떤 사건이 어떤 특별한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며, 어떤 직업,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임.
- 어떤 한 사람이 거쳐 온 장소, 그 사람이 살았던 기억, 장소와 그 장소에 함께 살았던 이웃들과 더불어 만든 사건들에 관한 경험과 생각, 나아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체험까지, 참나적이고 순간적으로 현상하는 이 모든 것이 한 인간의 ‘존재’에게 갖는 의미를 묻는 것이라고 봄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15

학문수행자로서 시민 구상(7)



-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데카르트가 발견한 ‘코기토’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음.
- ‘코기토’의 철학적 문제는 ‘유아론(唯我論)’에 있다. ‘코기토’는 닫힌 세계의 이론이기 때문에 열린 자연적 세계에 관한 이론이 닫힌 세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타자와 더불어 사는 인간의 삶에서 닫힌 세계가 갖는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임.
- 우리가 살아갈 때 ‘타인’을 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타인이 갖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었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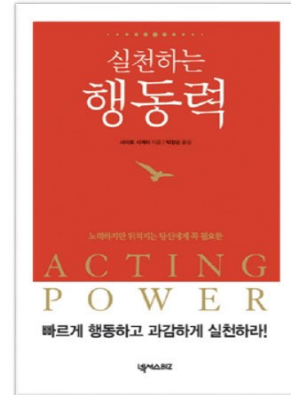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16

학문수행자로서 시민 구상(8)

-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서 우리는 타자를 주체화하고 있고, 나의 시선에 타자의 얼굴이 표상화됨.
- 그래서 타자를 읽어내는 방법, 타자와 소통하고 화해하는 방법이 필요함. 그것이 바로 리터러시일 것임.
- 리터러시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임. 신이 내린 이 ‘인간다운’ 선물의 포장을 열고 그 선물을 현실에 활용해야 함.
-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은 보이고, 우리가 실천하는 만큼 생존할 수 있음.
- 리터러시는 역량이며, 테오리아이며 다른 한편 프락시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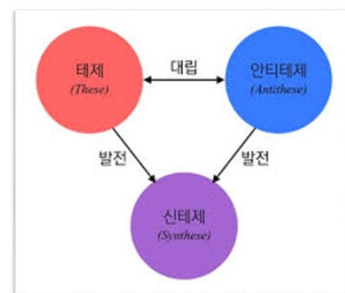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결론: 다문화 사회와 시민

- 우리 사회가 다문화 환경을 접하면서 이전의 다른 주체들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인들을 접할 수 있음.
- 명제로서의 리터러시는 이런 다문화 환경에서 반명제로서 프락시스가 되며, 이 프락시스는 다시 정명제로서의 리터러시로 환원됨.
- 사회문화적 텍스트가 자본과 이데올로기화 된다면 우리의 리터러시는 더욱 더 정교화되어야 함.
- 그러려면 비판적 행위의 프락시스가 타인과의 상호소통 과정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면...

학문수행자로서 시민과 사회문화 리터러시_인하대 김영순 교수



18

아시아 민주주의의 호(Arc of Democracy)와 중국의 도전

권재범 박사(한국외대)

I. 서론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4자안보협의체(쿼드: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쿼드의 목적이 자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데 있다고 인식하는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전략적 세력권 속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쿼드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일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자 중국은 2020년 한국과의 두 차례 정상 간 통화와 외교·안보 2+2 회의를 개최하며 사드를 둘러싸고 경색된 한중관계의 회복을 시도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环球时报)의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는 최근 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쿼드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한국과 중국 간의 신뢰관계는 다시 한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다(Cheng 2021).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국가는 상대방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국가들과의 연합을 공고히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협력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치는 중이다. 특히 한국이 쿼드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해 손을 내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고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모습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 봉쇄연합을 약화시키고 다른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어떠한 전략을 추진 중인가?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반중 견제 노력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지역 반중 안보 네트워크 형성 노력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공통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가들과 중요 안보파트너 국가 간의 군사·안보 협력 네트워크가 2010년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반중 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인 태국을 겨냥한 ‘빼기전략(wedge strategy)’을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우려와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협력 강화 및 소다자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반중 안보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자국을 봉쇄하는 연합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은 반중 견제전선의 강화를 막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 중 하나인 태국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지원 확대,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빼기전략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현재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듯 중국의 부상과 미중경쟁 심화라는 현상을 마주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Boon 2016; Chapman 2017; Grønning 2014; Hornung 2014; Lee 2016; Pant & Joshi 2017; Richey 2019).¹⁾ 다만,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팽창주의적 움직임을 독립변수로 두고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 확보를 위해 추진 하는 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반중 동맹/안보네트워크를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썩기전략을 분석한 연구들(Chai 2020; Huang 2020; Wigell 2019; Yoo 2015)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을 위협하는 반중 견제연합(balancing coalition)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연합의 참가국들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연합의 결함을 약화시키기 위한 썩기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썩기전략에 대한 연구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강대국 경쟁에 있어 동맹과 연합형성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썩기전략의 추진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3장에서는 현재 중국이 썩기전략을 추진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네트워크가 미국의 주도로 확대, 강화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중국을 포위하는 연합을 마주한 중국이 어떻게 썩기전략을 추진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의 확대를 막고 미국의 동맹국가를 중국의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중국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태국을 겨냥한 중국의 썩기전략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함께 향후 연구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끝맺는다.

II. 강대국 경쟁과 연합, 그리고 썩기전략

국가들은 적대국이나 위협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왜 동맹/연합 등을 형성하여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대하는가? 그리고 국가들은 자신에 반하거나 위협적인 연합을 왜 약화시키려 하는가? 현실주의 학자들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중앙 권위체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anarchy)’이다(Waltz 1979). 이러한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그 행위를 통제할 상위 권위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은 언제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소국이나 2선 국가들(secondary state)은 자신보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주의자들은 약소국이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과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연합을 형성하는 ‘외적균형(external balancing)’이라는 수단을 제시한다(Waltz 1979). 하지만 내적균형의 경우 약소국이 강력한 위협국에 단독으로 대응할 정도의 충분한 힘을 갖추는 것은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이미 강력해진 국가 역시 더 빠른 속도로 힘을 축적하는 만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Mearsheimer 2001, 157).

따라서 위협적인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소국은 ‘외적균형’도 고려하게 된다. 즉, 약소국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다른 약소국들과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체결하거나, 혹은 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군사·안보 이니셔티브 추진, 군사적 공조 강화 등을 중심으로

1) 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와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 행태를 다룬 연구는 상당히 많다. 다만,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극히 일부만 예시로 들었음을 밝힌다.

한 제한적인 외교적 연합(limited diplomatic coalition)을 형성함으로써 위협국가로부터의 생존능력을 제고하기도 한다(Mearsheimer 2001, 156; Paul 2005, 47; Walt 1987, 18). 약소국들에게 있어 위협적인 강대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단독으로 힘을 비축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안보환경에 놓인 다른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동맹 혹은 연합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Mearsheimer 2001; Walt 1987).

비단 동맹이나 연합의 형성은 위협적인 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약소국에게만 필요한 수단은 아니다. 두 강대국 간의 경쟁관계에 있어서도 동맹/연합의 형성은 경쟁에서 상대방에 대한 우위에 서기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세력전이론 학자들은 특히 강대국 간의 경쟁에 있어 동맹과 연합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²⁾ 현실주의의 하부이론인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패권국과 도전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힘이 비등해질 경우 양자 사이의 패권전쟁(hegemonic war) 가능성이 높아진다. 패권전쟁은 1) 도전국의 힘이 급속히 강해져 기존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경우 기존 패권국이 도전국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2) 기존 패권국이 만든 국제질서에 불만을 가진 도전국이 상당한 힘을 축적한 결과 기존 패권국에 도전해볼 만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해 도전국이 기존 패권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난다(Gilpin 1981; Kugler & Lemke 1996; Organski 1968).

결국 국제무대에서의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두 강대국들에게 있어 양국 사이의 ‘힘의 배분 상태(status of power distribution),’ 즉 누가 더 강한 총체적 국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두 강대국 간의 힘의 수준을 판단하는데 있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힘 뿐만이 아니라 동맹국가들이 얼마나 많고, 우호적인 연합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비록 강대국(A)은 동맹국이나 우호적 연합에 속한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평소에 경쟁국가(B)를 견제하고 억지하기 위해 연합한 국가들의 전력에 의존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군사적 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이들과 부담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전시의 경우 A의 동맹국가들이 군대를 동원하여 같은 편에서 B에 대항하거나, 혹은 동맹국들이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B의 군사적 시설 이용 요청을 거부하는 등과 같이 A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즉, A의 동맹국이 많아질수록 A를 위해 동원될 수 있는 동맹국들의 총체적인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B가 중심이 된 적대연합에 대해서도 더 강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 발생시에도 B와 그 연합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Mearsheimer 2001, 156). 역사적으로도 한국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등 국제연합의 여러 국가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으로 독일이 패배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적대연합에 속했던 미국의 참전이 지목되고 있다(Jung 2018, 266). 또한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은 극동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영국의 방해로 적절한 보급과 휴식을 취하지 못했으며, 이는 결국 러시아가 일본에 패배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결국 패권국이나 도전국 등과 같이 치열한 경쟁상태에 놓인 두 강대국은 경쟁의 우위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소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들을 자신의 동맹세력이나 우호적 연합으로 끌어들이거나 경쟁국가의 동맹/연합을 약화시켜야만 한다(Kim 1991, 834). 특히 동맹국가의 숫자나 우호연합의 세력에 있어 열세에 있는 강대국은 경쟁국가의 주도로 형성된 동맹/연합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그곳에 참여한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썩기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서 썩기전략이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들여 자신을 위협하거나 포위하는 동맹연합

2) 다만, 모든 세력전이론가들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오간스키(1968) 등과 같은 초기 세력전이론가들은 동맹의 형성/해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국가의 힘을 축적하는데 있어 동맹을 핵심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을 막거나(prevent), 와해시키거나(break up), 약화(weaken)시키기 위한 시도”로 정의된다(Crawford 2011, 156). 즉, 1) 다른 국가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연합체제에 참여하거나 적대국가와의 동맹 체결하는 것을 막고, 혹은 2)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적대적 연합체에 참여한 국가들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거나 자신의 편으로 포섭함으로써 연합의 견고함을 약화시키는 것이 썩기전략의 목적이다. 이렇게 썩기전략이 성공할 경우 경쟁자의 주도로 형성된 적대적 동맹/연합에 참여한 국가를 중립국이나 자신의 동맹국가로 전환시킬 수 있고, 따라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연합의 규모와 힘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Crawford 2011, 156).

이러한 썩기전략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선택적 수용전략(selective accommodation)’ 혹은 ‘보상적 썩기(reward wedge)’ 이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주로 보상 제공을 통해 추진된다. 강대국(A)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연합에 참여한 국가(B)를 겨냥해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여 B가 적대 연합 내의 다른 국가들과의 거리를 벌리게 만들거나, A의 편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다(Crawford 2011, 160-161). 경제적 보상 등과 같은 유인책을 사용할 경우, 연합 참여에 대한 B의 손익계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B는 A의 편을 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기존에 참가하던 연합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 또한 B가 A로부터 보상을 받아 연합에 대한 충성도를 낮추게 된다면, 그 연합 내의 다른 참가국들과의 불신이 높아지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합의 응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B에게 있어 A가 연합 내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보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B 역시 A의 편에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A로서는 보상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Izumikawa 2013, 507).

썩기전략의 두 번째 형태는 강압적 썩기(coercive wedge)이다. 강대국(A)이 적대적 연합에 참여한 국가(B)에 대해 지속적인 강경노선을 추진하고 위협을 주는 전략인데, B의 입장에서 A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혹은 A의 경쟁국이 A에 위협적인 연합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A는 그 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후보국가들을 압박하거나 위협을 가함으로써 연합에 대한 참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Crawford 2011, 161-162).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A가 강압적 수단을 통해 자신에게 반하는 세력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엄벌을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기존 연합에 B가 계속 참여할 경우 B가 부담해야 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비용을 더 높임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Izumikawa 2013, 503). A에 적대적인 연합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A로부터의 지속적인 정치,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된다면 B에게는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할 국내외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강압적 전략의 경우 역효과를 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A로부터의 압박을 받은 B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존에 속해 있던 연합 내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함으로써 그 연합의 협력 수준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B에 대해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A에게 부족한 경우나 A의 강압으로 인한 역효과로 B가 연합에 보다 더 가까워지더라도 A에게는 심각한 위협을 가중시켜주지 않을 경우와 같은 제한적 조건 속에서만 A는 강압적 전략을 추진할 유인을 가진다(Crawford 2011, 162; Izumikawa 2013, 508-509).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중국은 썩기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 지역에 공식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더해 주요 안보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안보네트워크를 확대 중이다. 반대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식적인 동맹국이 부재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전략적 협력 수준 또한 미국보다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결국 동맹국과 같은 아군을 포섭하고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한 연합세력 형성에 있어 미국은 이미 ‘인기 있는 패권국’이며 중국은 ‘외로운’ 도전국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수 밖에 없다(Jung 2018). 따라서 중국에게 있어 반중 안보네트워크에 참여 중인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멀어

지게 만들거나 일부 국가를 중국의 편으로 포섭함으로써 반중 안보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와해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최근 중국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할 정도의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역효과에 대한 위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썩기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압적 썩기보다는 보상적 썩기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Ⅲ.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대중국 안보네트워크 강화

미국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관계를 강화시키며 보다 견고한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 견제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팽창주의적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상당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미국방부에서 2012년 발표한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피력하는데 있어 중국의 부상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인정하며 미중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훨씬 투명해야 함을 주장한 바, 중국에 대한 우려를 암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2). 그리고 2018년의 ‘국가방위전략 보고서(Summary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SA)’에서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요인은 ‘현상타파 국가들’의 존재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대표적인 현상타파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2). 무엇보다도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사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약탈적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이웃 국가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2-3). 그리고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동맹국들과 안보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핵심 중 하나임을 지적한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5).

일본이나 인도, 필리핀 등과 같이 영토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들이나 해양에서의 중국의 강압행위가 자국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하는 호주 등도 최근 중국의 강압적이고 일방주의적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들 역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바탕으로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지역질서의 유지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견고한 대중국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체제 강화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체제 강화의 주요 협력국은 일본, 호주 등과 같은 공식 동맹국들과 인도, 싱가포르 등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우려는 이들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 미국은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안보 이니셔티브 체결과 미군의 배치 확대, 양자 군사훈련 확대, 무기 및 군사기술 협력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은 2010년대 이후 아시아 안보협력 국가들과의 새로운, 혹은 개정된 안보협약이나 안보 이니셔티브를 체결하며 양자 안보협력 강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우선 미국은 일본을 핵심국가로 인식하며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미일 양국은 새로운 안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수준을 높이는 한편 협력 분야의 범위 역시 대폭 확대하고 있다(Hornung 2014, 105; Hughes 2016, 147). 미국과 일본은 2010년대 들어 기존의 양자 전략회담(strateg

ic dialogue)을 양국 국방 및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연례회담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2+2 미일안보 협의기구(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를 설치하며 두 국가 간 정보수집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운영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Grønning 2014, 7). 또한 두 국가는 2015년 미일 안보지침(US-Japan Defense Guideline)을 개정하여 정보 감시 및 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탄도미사일방어, 해양안보, 사이버 및 우주안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교류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Hughes 2016, 147).

미국은 호주와도 의미 있는 안보협약을 체결하며 미-호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호주 방문 당시 양국은 2,500명 규모의 미해병대 병력을 호주 북부 다윈(Darwin) 군기지에 순환배치하기로 합의하였고, 뒤이어 2014년 ‘군사 배치 협정(Force Posture Agreement)’을 체결해 호주에서 미군 병력의 지속적인 배치가 합의됨으로써, 호주 영토 내에서 양국 군대 간에 보다 포괄적인 합동군사훈련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Chapman 2017, 7; Kwon 2020, 510).

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동맹국인 필리핀 역시 미국과 다양한 인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2012년 처음으로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개최하였고, 이 회담에서 필리핀은 수빅(Subic) 등의 해군 및 공군시설들을 미군에 재개방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필리핀에서 미군 병력의 순환배치, 해군 함정과 전투기의 정기적 필리핀 방문, 수리 및 보급 등을 별도의 공식적 합의 없이도 추진하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보폭을 보다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년 후인 2014년에는 두 국가 사이에 ‘향상된 국방협력 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이 체결되어 필리핀 내에서 미군 병력과 항공기, 함정의 순환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Zhao & Qi 2016, 492).

인도는 비록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국가는 아니지만 201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 유지와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두 국가 간에도 안보분야에서의 다양한 협이가 만들어지고 있다(Boon 2016, 800). 두 국가는 2005년 체결되었던 양국 간 국방협력 협정을 연장하기로 2014년 합의하는 한편 2015년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방장관의 인도 방문시에는 공식적으로 ‘양국 간 국방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안(New Framework for Defense Cooperation)’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정상회담에서는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에서의 공동 전략비전이 채택되어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양국 간의 공조 강화 의지가 표명되었으며, 2016년에는 양국 간 해양 안보회담 개최가 합의되며 미국과 인도 간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Pant & Joshi 2017, 141). 특히 2016년 인도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과 인도 정상은 논의가 시작된 후 12년 동안 타결되지 않았던 ‘상호군수교환에 대한 합의각서(Logistics Exchange Memorandum of Agreement)’에 서명하며³⁾ 양국 간의 군수 시설 이용 및 군수보급품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두 국가 간의 국방협력 장애물을 없애감으로써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켰다(Pant & Joshi 2017, 133, 140).

한편, 2012년 싱가포르와의 안보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미국은, 2015년 12월 싱가포르와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기존의 양국 간 협정보다 더 포괄적인 새로운 방위협정을 체결하며 군사, 안보정책, 전략 및 기술, 비전통안보 문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고위급 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약속하였다(The Diplomat 2015/12/08). 무엇보다도 미국과 이들 국가들은 각종 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행의 자유와 법에 기초한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하며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는 등,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이들 간의 여러 안보협정 체결 등을 이끈 주

3) 2000년대에도 인도는 비전통외교의 전통과 미국에 대한 여전한 불신 등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안보협정 체결에 주저해 왔고, 상호군수교환에 대한 합의각서 역시 논의 시작 직후부터 인도 내에서 많은 국내적 반대를 받기도 했다(Pant & Joshi 2017, 133).

요인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군의 병력 증강과 최신 군 전력 배치 역시 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협력국가들의 해양안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2년 일본 요코타(横田) 공군기지에 양국 합동 방공 사령부를, 일본 자마(座間)기지에 미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간의 합동본부를 설치하며 이 지역에서 미군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 중국 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과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일본에 두 번째 X밴드 레이더(X-Band radar system)와 최신형 다목적 수직이착륙기(MV-22 Osprey), P-8 포세이돈(P-8 Poseidon) 차세대 해상초계기, F-35B 전투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 무인 고공 정찰기 등과 같은 최신 전략자산을 배치하여 중국 견제를 위한 양국 간 공조능력을 강화시켰다(Hornung 2014, 106).

호주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호주 다윈 군사기지에 미해병 2,500명의 순환배치가 합의된 이후 제2차세계대전 이후로는 처음으로 미해병대 병력이 최신 전투기와 장갑차 등 첨단 무기들과 함께 호주에 영구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호주에 배치되어 있는 군병력과 최신 군사무기들을 유사시 동남아 지역 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해양 영토문제에 있어 중국에 대한 대응능력까지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Lee 2016, 17). 이와함께 2014년에 미국과 호주는 호주 서부 엑스머스(Exmouth) 지역에 미국의 'C밴드 우주감시 레이더(C-band space surveillance radar)' 배치 논의를 시작했고(Medcalf 2014, 479), 2017년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었다.

한편, 2010년대 중반 싱가포르와의 합의를 통해 미국은 P-8 초계기를 싱가포르에 최초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영공에서 임무 수행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일본과 필리핀 이외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P-8를 운용하게 되었고, 동시에 미해군의 연안전투함(Littoral Combat Ship) 역시 1-2년 간격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순환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The Diplomat 2015/12/08).

셋째, 미국과 지역 국가들 간의 군사훈련의 확대 역시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지역협력체제 강화를 보여주는 중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호주의 경우 미국은 2010년대 이후 미-호 간의 대표적인 합동훈련(Exercise Talisman Saber)의 규모를 확대하며 양국 군대 간의 공동임무수행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중이다(Kwon 2020, 511). 또한 미국은 일본과도 양적, 질적 측면에서 양자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2010년 12월 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미-일 합동 기동훈련(Exercise Keen Sword)에 44,000명의 참여병력과 60척의 전투함, 400기의 전투기, 탄도미사일 방어 무기 등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로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때 훈련에서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훈련, 근접항공기 지원 훈련, 실탄 사격훈련 등이 포함되면서 훈련 내용의 정교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Grønning 2014, 8). 또한 미-일 해군 및 해병대는 합동 수륙양용훈련(Operation Dawn Blitz)을 2010년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데, 이 훈련은 동중국해 영토분쟁에서 중국의 흑시 모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ønning 2014, 9).

미국은 동맹국 뿐 아니라 안보 파트너 국가들과의 합동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와도 군사훈련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90년대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말라바 훈련(Exercise Malabar)을 2010년대 들어 규모와 형식을 확대하는 한편, 훈련내용의 정교함도 향상시켜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다(Pant & Joshi 2017, 142). 무엇보다도 인도는 미국과 공식적인 동맹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간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미국과 가장 많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국가로 기록되면서 미국과 인도 간의 안보관계가 근 10년 동안 현저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Boon 2016, 800).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의 합동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 4월에는 싱가포르 공군이 처음으로 전투기와 공군병력을 꺾에 파견하여 미공군과 최초의 합동공

육을 실시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양국 해군이 괌에서 처음으로 해군합동훈련(Exercise Pacific Griffin)을 실시하기도 했다(The Diplomat 2017/12/06).

이렇게 미국은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훈련 확대를 통해 양국 군대 간 상호운용능력(intoperability), 준비태세, 미사일 공격에 대한 정보 공유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많은 훈련들이 태평양 지역에서 대잠수함, 대공훈련 등과 같은 상대 해군력에 대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에 대한 점령 훈련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해양 분쟁 문제에 대한 미국과 지역 국가들 간의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기판매 및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서도 미국은 2010년대 들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F-35 전투기 개발에 일본 방위산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며 미일 간의 무기개발 협력을 공고히 하기도 했다(Grønning 2014, 7). 또한 인도의 경우 미국은 2010년대 들어 인도 공군에 C-130 허큘리스(C-130 Hercules) 수송기를 인도하였고, 2016년에 인도와 145대의 M-777 곡사포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허큘리스 수송기는 대규모의 인도군 병력을 산악지역으로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수송하는데 기여했고, M-777 곡사포는 산악지역에 이상적 무기로 평가받으며 영토분쟁 지역에서 인도의 대중국 견제 전력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Joshi & Mikherjee 2019, 34). 이와 함께 미국과 인도는 2012년에 체결되었다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던 ‘국방기술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Defense Technology and Trade Initiative)’를 2014년 활성화시키며 양국 간 국방기술 협력 논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후 2015년 항공모함 관련 기술협력 및 제트 엔진 기술협력 합의와 2016년 항공모함 개발 기술과 관련한 정보공유 협정을 체결했다(Pant & Joshi 2017, 140). 이외에도 미국은 필리핀에 2013년부터 해안감시센터 건설을 위한 1,900만 달러와 함께 해안 레이더 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필리핀 군의 해양경계능력 구축을 위해 해군함선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과 통신장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박 활동에 관한 정보공유 및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추진 중이다(US Department of Defense 2016, 27).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최근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에 의해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위협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지역 질서의 유지는 물론이고 자국의 안전을 위해 중국이라는 경쟁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국과의 안보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내 국가들과의 반중 안보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에 대한 공통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 견제 안보네트워크 확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2010년대 이후 미국과 각 국가들 간의 양자 안보관계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2. 지역 내 미국 주도의 소다자주의 체계 구축

최근 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네트워크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사항은 미국과 지역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소다자협력(mini-lateral cooperation)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에는 미국과 지역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관계가 안보 네트워크의 주를 이루었다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협력 국가들과의 정례적 3자, 4자 안보 대화 협의체나 합동 훈련 등을 실시하며 아시아에서도 소다자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Scott 2019, 143). 일례로 미국은 2006년 시작된 미국-일본-호주 3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2010년 이후 군사협력 분야로 확대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안보 네트워크의 소다자주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세 국가는 2014년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3국 간 해양안보분야에서의 공조 강화를 합의한 바 있으며(US Department of Defense 2016, 28), 현재는 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양 지역의 해양안보까지 논의하는 장으로 확대되었다(Scott 2019, 151). 또한 미국은 인도와 일본으로 구성된 또 다른 소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2011년, 3국 간의 전략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고위장성급으로 구성된 회담이 2015년에는 장관급 회담으로, 그리고 2018년에는 3국 간의 정상회담으로 격상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cott 2019, 152). 한편, 미국 주도의 소다자 안보협력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쿼드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쿼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참여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도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소다자 안보체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만큼 미국은 쿼드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다자 안보체제 구축 노력은 다자 훈련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호주 3국은 2011년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Exercise Red Flag Alaska)'라는 3자 합동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지상군 합동훈련(Exercise Southern Jackaroo)과 대잠수함훈련(Exercise Pacific Bond)를 개시했다(Kwon 2020, 515; Satake & Hemmings 2018, 830). 그리고 미국은 2010년대 중반 일본, 인도와 함께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주도 아래 태평양 인근에서 림팩 훈련(Exercise Rim of the Pacific)과는 별도로 새로운 3자연합훈련 개최에 합의를 하며 3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훈련의 개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Pant & Joshi 2017, 142).

또한 기존 양자훈련에 다른 국가가 참여함으로써 다자훈련으로 확대 실시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기존에 일본 공군과 실시해오던 양자 합동훈련(Exercise Cope North)에 2012년부터 호주 공군을 참가시켜 3자 합동훈련으로 확대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미국과 호주 간의 합동군사훈련(Exercise Sabre)에 일본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이 역시 3자 훈련으로 정례화되기 시작했다(Satake & Hemmings 2018, 830). 그리고 미국과 인도 간의 말라바 훈련(Exercise Malabar)에 일본이 2015년부터 정식 참가하게 되면서 이 훈련 역시 공식적으로 다자훈련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인도 사이의 3자 훈련은 2007년부터 2018년 까지 벵골만과 서태평양에서 총 7회 실시되어 사실상 정례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8년 말라바 훈련에서는 훈련 내용을 대잠수함 전투 훈련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중국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세 국가의 공동대응 능력 향상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Joshi & Mikherjee 2019, 35; Scott 2019, 152).

일본이나 호주, 인도 등과 같은 지역 강대국 이외에도 미국은 2010년대 이후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자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201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CARAT(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 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왔었지만, 이는 모두 개별국가들과의 양자훈련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이들 동남아 국가들과의 양자훈련에 새로운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CARAT 훈련의 다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SEACA(Southeast Asia Cooperation and Training) 훈련도 기존 6개 국가들(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 공동 참여하는 다자훈련으로 확대 변환을 추진 중이다(The Diplomat 2015/05/07). 이렇게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수의 국가들과 다자 훈련을 실시해오면서 훈련의 규모와 정교함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군사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를 중국에게 보내고 있다(Takashi & Kayakey 2014).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안보협의체에 참여한 국가들은 국제법의 중요성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강조와 함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해양안보 문제에 있어 공조 강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들은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지만, 이 시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문제에서 중국의 강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들의 최우선 협력 목표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지역 국가 간 1대 1 양자동맹에 기반을 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형태의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의 ‘허브 앤 스포크’ 형태의 안보체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중심의 집단방어시스템에 기반한 유럽에서의 다자안보체제와 비교할 때 제도화의 수준이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체제 참여 국가들 간의 협력과 공조 수준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ichey 2019, 276). 뿐만 아니라 양자동맹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의 ‘허브 앤 스포크’ 구조는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맹체제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Richey 2019, 284). 결국 미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아시아에서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형태 내에 소다자 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공세적 행위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IV. 중국의 대응 - 태국을 표적으로 한 중국의 썩기전략

미국은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 행위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미국 및 그 동맹국가들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도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Shearer 2017, 83-84).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상호 정보공유, 감시, 정찰, 미사일방어, 수중전 등 핵심 영역에서의 협력 수준과 공조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지역 협력국가들 간의 상호운용능력의 신장과 높은 수준에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도 효율이 높은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Shearer 2017, 84). 이에 따라 미국은 201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소다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결과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대중국 견제연합 안으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포섭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안보협력 관계 구축에 힘을 쏟는 미국의 행위가 결국 중국을 봉쇄하고 포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 줄 것으로 인식한다. 즉,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Ratner 2013, 23). 시진핑 주석은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상호협력 신뢰양성조치 회의(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ummit)’에서 동맹을 냉전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로섬 게임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다(Zhang 2014). 더욱이 미국이 일본이나 인도 등과 같은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세력 경쟁에 있어 미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지역내 개별국가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Ratner 2013, 23). 즉, 특정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안보네트워크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혹은 중국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는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그 동맹국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거나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일본이나 호주 등과 같은 협력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문제, 홍콩 문제를 놓고 공동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5G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호주 등은 미국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 지역에서도 지역 국가들은 미해군과 공동으로 정찰임무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합전선이 확대되고 강화될수록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과 함께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

어서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상태 역시 중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중국은 반중 연합이 더 이상 견고해지는 것을 막거나 이 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시도, 즉 미국의 안보네트워크에 포함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썬기전략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내 학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경제력과 정치력, 심지어는 군사력까지도 활용하여 주변 이웃 국가들이 중국의 이익에 반대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주변국가들이 중국의 이익을 지지할 경우 보상을 주고, 반대할 경우 처벌을 내리는 등과 같은 선택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썬기전략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중국에서 높아지고 있다(Swaine 2014, 25).

이러한 인식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미국의 반중봉쇄 전략에 호응하지 않도록 하거나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즉, 중국은 자신과의 관계 개선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득하는 한편 이들이 미국의 전략적 세력권 아래 완전히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군사협력 확대, 또는 압박 등을 통한 썬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필리핀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미국 주도의 쿼드에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행위들 역시 이러한 썬기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안보 협력국들 중 반중 안보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및 기여 수준이 낮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들을 썬기전략의 우선적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바,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 태국을 들 수 있다. 미국에게 태국은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동남아시아의 안보환경의 변화와⁴⁾ 태국 국내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이견(민주주의 및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태국 동맹은 과거보다 경색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Dalpino 2014, 147). 2006년과 2014년 태국에서 쿠데타와 함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거나 태국과의 경제·군사적 협력관계를 축소하는 등 대태국 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은 태국에 할당된 350만 달러 규모의 해외군사차관(Foreign Military Financing)을 축소시키고 태국 장교들을 미국 군사기관에서 교육시키기 위한 130만 달러 규모의 국제군사교육 프로그램(IMET: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을 중단하였다(Tow 2015, 15). 그리고 미국-태국 간의 합동군사훈련(Exercise Cobra Gold)의 경우 2015년 실시된 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 실시하였으며, 2015년 발간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는 태국을 말레이시아, 미얀마보다도 낮은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며 정치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Gill 2016, 14; Prasirtsuk 2016, 172). 결국 2010년대 들어 미국이 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사이 양국 동맹관계는 불가피한 경색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뿐만 아니라 미국-태국 동맹 약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태국에 대한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하는 중이다(Storey 201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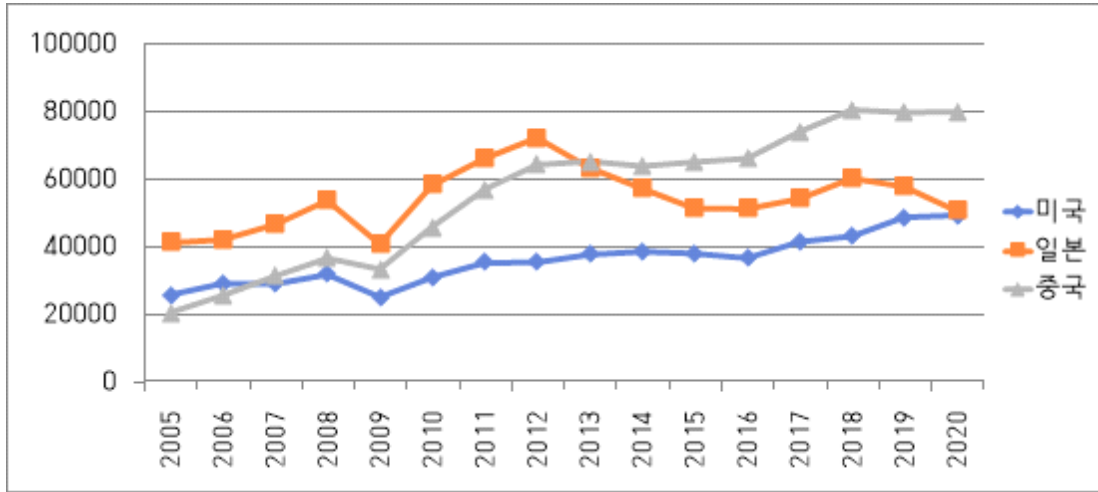
1. 경제적 접근

중국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며 태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중국과 태국 간의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07년에는 미국을, 그리고 2013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 지위를 점하고 있다(<그림

4) 냉전시절 동남아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 목표였던 미국에게 있어 당시 태국은 핵심 파트너(linchpin) 국가였다. 하지만 냉전 이후 사회주의의 위협이 사라지고 미국과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태국이 지니던 전략적 가치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Dalpino 2014, 153).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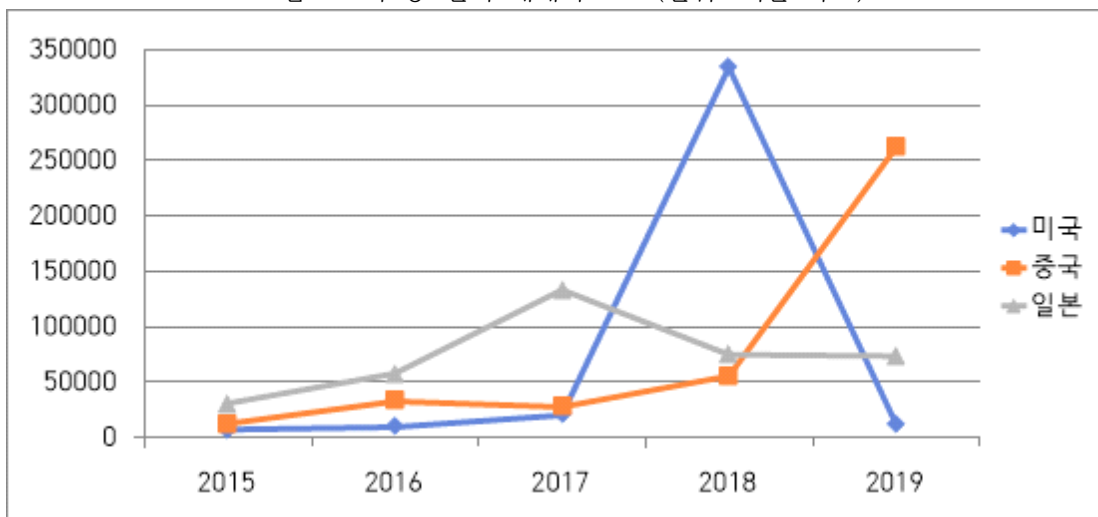
<그림 1> 미-중-일과 태국 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태국중앙은행(Bank of Thailan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이와 함께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태국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12월 태국 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태국의 인프라 건설, 중국의 대태국 투자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unyaratabandhu & Swaspitchayaskun 2018, 335-336). 그리고 2007년 중국이 투자한 태국 라용(Rayong)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이후 중국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어 2013년과 2018년 사이에는 이곳에 진출한 전체 외국 기업의 2/3가 중국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 118개의 중국 기업들이 이 산업단지에 총 35억 달러를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약 35,000명의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하며 태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보도되었다(China Daily 2021/04/21).

<그림 2> 미-중-일의 대태국 FDI (단위: 백만 바트)



출처: 태국 투자위원회(Thailand Board of Investment)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한편,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역시 신속하게 태국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공고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FDI를 태국에 지원하자 중국 역시 1년 후인 2019년에 태국에 대한 FDI 규모를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늘리며 일본과 미국을 모두 제치고 태국에 대한 최대 FDI 지원국이 되기도 했다(<그림 2> 참고). 무엇보다도 2010년대 중반까지도 중국의 대태국 FDI 투자규모는 당시 최대 투자국이었던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보다 뒤쳐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Hewison 2018, 119-120), 중국이 태국에 대한 FDI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갔는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이후 중국은 태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은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의 쿠데타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비난과 함께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받으며 기업신뢰도(business confidence) 수준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Hewison 2018, 121).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등과는 달리 태국 군부정권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주는 한편 경제 지원을 확대하며 태국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제공해오고 있다. 일례로 태국은 쿠데타 이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특히 여행업계가 많은 타격을 입던 상황이었다. 이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들의 태국 여행을 적극 권장했고, 그 결과 2015년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1/3에 해당하는 약 8백만명을, 2016년에는 약 900만명을 기록했다(Hewison 2018, 121). 이를 바탕으로 태국 관광업계의 소득 역시 2014년 460만 달러에서 2015년 79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며 태국 관광업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Punyaratabandhu & Swaspitchayaskun 2018, 337). 또한 이 시기 태국 내에서는 쌀 가격이 폭등하고 재고가 쌓였던 상황이었는데 2014년 12월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태국에 공식 방문하여 농산물 구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태국 농산물을 중국이 수입하는 등 태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Hewison 2018, 124). 태국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도움이 자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권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의 도움을 환영하였으며, 결국 중국은 태국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온전히 편입되는 것을 막고 중국-태국 간의 우호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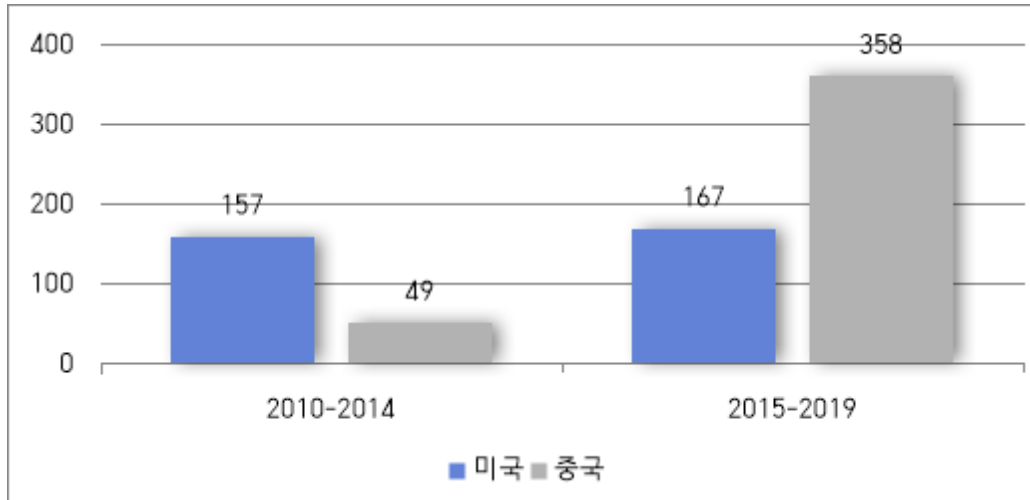
2. 군사·안보적 접근

중국은 태국을 포섭하기 위해 2010년대 들어 군사·안보적으로도 태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대태국 제재가 강화되는 틈을 타 태국과의 군사적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했다. 중국과 태국 간의 군사·안보적 협력관계는 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군사분야 고위급 회담 활성화, 군 장교 교육 제공, 합동훈련 및 무기 판매 확대 등과 같은, 미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방식을 차용하여 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Dalpino 2014, 157-158).

태국에 대한 무기판매 측면에서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역할을 일부분 대체하면서 태국의 중요한 군사·안보적 행위자로 올라섰다.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태국 군사정부와의 무기 판매 계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반대로 태국의 새로운 군사정부는 정권의 안정과 국내외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무기 도입이 급하던 상황이었다(Hewison 2018, 126). 중국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국에 대한 자국의 값싼 무기를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중국은 2015년 포병위치탐지레이더(BL904A artillery locating radar) 2기,

2016년 신형 지대공 미사일 포대(KS-1C), 2016-2017년 VT-4 주력전차 48대(2억 8천만 달러 규모), 2017년 S-26T 잠수함 3척(약 10억 달러 규모), 2017년 ZBL-09 병력호송장갑차 34대 등을 태국에 판매·인도했다(Storey 2019, 4). 이 무기들은 당시로서 중국 최신 무기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2017년에 이루어진 잠수함 3척의 판매 계약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자국 잠수함을 인도한 사례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태국 역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통해 중국 신형 잠수함을 도입함으로써 해양 감시 및 영해 보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Storey 2019, 4).

<그림 3> 미국과 중국의 대태국 무기판매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의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무엇보다도 2014년 쿠데타를 기점으로 중국은 적극적으로 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면서 미국을 제치고 태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5년 간 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기 판매규모는 미국이 약 15,700만 달러(연평균 3,140만 달러), 중국이 약 4,900만 달러(연평균 1,225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5년간의 태국에 대한 두 국가의 무기 판매규모를 보면 과거 5년과 비교해 미국이 약 16,700만 달러(연평균 3,340만 달러)로 소폭 상승한데 비해 중국이 약 35,800만 달러(연평균 7,160만 달러)로 대폭 상승하며 태국에 대한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태국 간의 관계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쌓아왔던 태국과의 군사적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⁵⁾ 일례로 중국은 2017년에 태국과 합동으로 태국 콘깬(Khon Kaen) 지역에 군사 무기 제조 및 보수 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태국 내에서 중국산 무기들의 제작과 보수, 조립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Bangkok Post 2017/11/16). 그리고 중국은 이 시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국에 대한 무기 수출에 박차를 가했다. 2018년과 2019년 중국의 대태국 무기 판매 규모는 여전히 미국에 앞서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의 대태국 무기판매규모는

5)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국은 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브라운 총리를 백악관에 공식 초대하는 한편 양국 간 양자훈련 역시 과거 규모로 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7년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군 최고위 장성으로서 태국을 공식 방문하였고 이후 양국 국방부장관 및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성사되었다. 이와함께 미국은 태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며 태국에 블랙호크 헬기 4기, 60여대의 신형 장갑차를 판매했다(Hewison 2018, 126; Storey 2019, 3).

감소한 반면 중국의 무기 판매 규모는 약 2배 증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중국 역시 신속하게 태국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⁶⁾

또한 중국은 2010년대 들어 태국과 군사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이 태국에 대한 IMET를 중단한 후 중국은 신속하게 중국 군사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태국 장교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Storey 2019, 2). 또한 2015년 중국의 창완취안(常万全) 국방부장의 태국 방문 당시 중국은 태국에 군사기술에 대한 정책 조언과 초국가 범죄에 관련된 정보 제공을 약속한 협약을 체결하였다(Hewison 2018, 125).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태국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웨이펑허(魏凤和) 국방부장이 신속히 태국을 방문하여 태국 총리와의 회담을 가졌고, 이때 군사장비 및 기술, 교육, 합동훈련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촉진을 위한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Xinhuanet 2019/11/17).

합동군사훈련의 확대 역시 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다. 중국과 태국은 2010년 처음 실시한 합동 해군훈련(Exercise Blue Strike)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2016년의 합동 해군훈련에서는 약 1,000명의 참가 병력이 합동수륙양용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국-태국 해군 간의 공조능력과 합동 작전수행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기도 했다(The Diplomat 2016/05/23). 또한 양국은 2015년 최초로 합동 공군훈련(Exercise Falcon Strike)를 실시했는데, 무엇보다 이 훈련의 경우 ‘코브라 골드’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실시됨으로써 많은 주목을 끌기도 했다(Nikkei Asia 2017/02/02). 2010년대를 통틀어 태국은 동남아 국가들 중 중국과 가장 많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특히 2019년 부터는 해마다 양국 특수부대 훈련(Exercise Strike), 합동 해군훈련, 합동 공군훈련을 한해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훈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Storey 2019, 8).

물론 2010년 이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국과 태국 간의 합동군사 훈련은 미국-태국 양자훈련과 비교하면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으며, 훈련의 정교함이나 복잡성 등에서도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Hewison 2018, 125). 하지만,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여러 종류의 합동훈련을 태국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중-태 각급 군대 간의 신뢰와 협력 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은 2010년대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력체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접근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중국은 특히 2014년 쿠데타 이후 미-태 동맹이 경색된 틈을 타 태국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 군사교육 지원 강화, 양국 간 합동훈련 확대 실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태국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군사-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태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 수출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고, 태국은 오랫동안 안보적 위협으로 인식해온 중국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협력국가로까지 인식하게 되면서 양국 간의 군사협력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 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Hewison 2018, 125; Storey 2015).

V. 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과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군사-안보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반중 안보네트워크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참가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6) 태국에 대한 중국의 무기판매액은 5,200만 달러(2018년)에서 9,700만 달러(2019년)로 증가한 반면 미국의 무기판매액은 4,900만 달러(2018년)에서 1,600만 달러(2019년)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미국(1,900만 달러)이 중국(900만 달러)을 앞섰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태국에 대한 두 국가의 무기판매 총액은 여전히 중국(28,900만 달러)이 미국(11,300만 달러)을 크게 앞서고 있다(SIPRI 2021).

은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양영토분쟁 문제에 있어 법과 규칙에 근거한 질서 확립과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군사행동 금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중국의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강력히 공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안전 확보와 이익 유지를 위해 미국 뿐만 아니라 반중 안보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바,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2006년과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태국을 표적으로 썩기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은 부강한 경제력과 값싼 무기 등과 같이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미국과 태국 간의 관계 악화라는 기회를 포착하여 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상 썩기 전략을 주로 구사하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태국과의 관계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태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를 통해 중국은 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 안보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보다 친중국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태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나 중국 내 인권문제를 비판하고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례로 태국은 2015년 중국의 요구에 따라 태국 내에 구금되어 있던 위구르족 중 중국 국적으로 확인된 100명을 중국으로 추방하면서 신장 지역 인권을 국제이슈화 시키고 있던 미국의 노력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Chaichalearmmongkol & Chen 2015). 또한 2016년에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군사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 태국은 이 해역에서의 평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Reuters 2016/09/07). 즉, 중국의 썩기전략은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결정을 하고 중국을 지지하게끔 유도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반중 네트워크의 한 축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전히 미국에 호응해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으며, 미국 주도의 안보네트워크 역시 현재로서는 공고해 보이지만, 중국 역시 의미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썩기전략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대 후반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최근 미국과 보폭을 맞추며 대만 문제나 해양영토문제, 5G 도입 문제 등에 있어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필리핀 역시 한때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동안 중국에 치우치는 행보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최근에는 미국과의 안보협정을 연장하고 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썩기전략 역시 성공적이라고는 평가하기에는 모호하다. 즉,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반중 연합으로부터 아시아의 국가들이 빠져 나와 중국의 편에 서기를 바라며 이들을 겨냥해 여러 전략들을 추진해 왔지만, 태국과 일본, 필리핀의 사례에서 보듯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이끌게 된 요인들을 찾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angkok Post. 2017. "Thailand Plans Joint Arms Factory with China." (2017/11/16).
- Bank of Thailand. 2021. "Trade Classified by Country/Economic Territories." https://www.bot.or.th/App/BTWS_STAT/statistics/BOTWEBSTAT.aspx?reportID=744&language=eng (검색일: 2021.04.30.).
- Boon, Hoo Tiang. 2016. "The Hedging Prong in India's Evolving China Strateg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5, No. 101, pp. 792-804.
- Chapman, Bert. 2017. "US Marine Corps Battalion Deployment to Australia: Potential Strategic Implications." *Security Challenges*, Vol. 13, No. 1, pp. 1-18.
- Chai, Tommy S. H. 2020. "How China Attempts to Drive a Wedge in the US-Australia Alliance."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74, No. 5, pp. 511-531.
- Chaichalearmmongkol, Nopparat and Te-Ping Chen. 2015. "Thailand Deports 100 Muslim Uighurs to China." *Wall Street Journal* (July 09).
- Cheng, Xiaohu. 2021. "Seoul Shouldn't Give Up Strategic Ambiguity over Joining Quad." *Global Times* (March 11).
- China Daily. 2021/04/21. "Industrial Chinatown Rides High on BRI."
- Crawford, Timothy W. 2011. "Preventing Enemy Coalitions: How Wedge Strategies Shape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4, pp. 155-189.
- Dalpino, Catharin. 2014. "The US-Thailand Alliance." Ashley J. Tellis, Abraham M. Denmark and Greg Chaffin eds. *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pp. 146-162. Seattle, WA: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 Gill, Bates. 2016.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5: Across the Region, US-China Competition Intensifies." *Asian Survey*, Vol. 56, No. 1, pp. 8-18.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ønning, Bjørn Elias Mikalsen. 2014. "Japan's Shifting Military Priorities: Counterbalancing China's Rise." *Asian Security*, Vol. 10, No. 1, pp. 1-21.
- Hewison, Kevin. 2018. "Thailand: An Old Relationship Renewed." *The Pacific Review*, Vol. 31, No. 1, pp. 116-130.
- Hornung, Jeffrey W. 2014. "Japan's Growing Hard Hedge against China." *Asian Security*, Vol. 10, No. 2, pp. 97-122.
- Huang, Yuxing. 2020. "An Interdependence Theory of Wedge Strategie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3, No. 2, pp. 253-286.
- Hughes, Christopher W. 2016. "Japan's 'Resentful Realism' and Balancing China's Ris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9, No. 2, pp. 109-150.
- Izumikawa, Yasuhiro. 2013. "To Coerce or Reward? Theorizing Wedge Strategies in Alliance Politics." *Security Studies*, Vol. 22, No. 3, pp. 498-531.
- Joshi, Yogesh, and Anit Mukherjee, A. 2019. "From Denial to Punishment: the Security Dilemma and Changes in India's Military Strategy towards China." *Asian Security*, Vol. 15, No. 1, pp. 25-43.
- Jung, Sung Chul. 2018. "Lonely China, Popular United States: Power Transition and Alliance Politics in Asia." *Pacific Focus*, Vol. 33, No. 2, pp. 260-283.

- Kim, Woosang. 1991. "Alliance Transitions and Great Power Wa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pp. 833-850.
- Kugler, Jacek, and Douglas Lemke. 1996. *Parity and W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Kwon, Jaebeom. 2020. "When the Kangaroo Encounters the Flying Dragon: The Growth of Balancing Elements in Australia's China Policy." *Pacific Focus*, Vol. 35, No. 3, pp. 491-529.
- Lee, Lavina. 2016. "Abe'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and New Quadrilateral Initiative: An Australian Perspective."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30, No. 2, pp. 1-41.
- Mearsheimer, John.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Company.
- Medcalf, Rory. 2014. "In Defence of the Indo-Pacific: Australia's New Strategic Map."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No. 4, pp. 470-483.
- Nikkei Asia. 2017. "Thailand and China: Brothers in arms." 2017/02/02.
- Organski, Abramo F. K. 1968.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 Pant, Harsh V., and Yogesh Joshi. 2017. "Indo-US Relations under Modi: the Strategic Logic Underlying the Embrace." *International Affairs*, Vol. 93, No. 1, pp. 133-146.
- Paul, Thazha V. 2005. "Soft Balancing in the Age of US Prima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1, pp. 46-71.
- Prasirtsuk, Kittii. 2016. "Thailand in 2015: Bill, Blast, and Beyond." *Asian Survey*, Vol. 56, No. 1, pp. 168-173.
- Punyaratabandhu, Piratorn, and Jiranuwat Swaspitchayaskun. 2018.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a-Thailand Development unde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Chinese Economy*, Vol. 51, No. 4, pp. 333-341.
- Ratner, Ely. 2013. "Rebalancing to Asia with an Insecure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2, pp. 21-38.
- Reuters. 2016/09/07. "Thailand 'Supports' China's Efforts to Maintain Maritime Peace."
- Richey, Mason. 2019. "US-led Alliances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Security Disorder: Comparative Responses of the Transatlantic and Asia-Pacific Alliance Systems."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6, No. 3, pp. 275-298.
- Satake, Tomohiko, and John Hemmings. 2018. "Japan-Australia Security Cooperation in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texts." *International Affairs*, Vol. 94, No. 4, pp. 815-834.
- Scott, David. 2019. "The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of Japan's 'Indo-Pacific' Strategy."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6, No. 2, pp. 136-161.
- Shearer, Andrew. 2017. "US-Japan-Australia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Trump Era: Moving from Aspiration to Action." *Southeast Asian Affairs*, pp. 83-100.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1.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s." <https://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21.04.29.).
- Storey, Ian. 2015. *Thailand's Post-Coup Relations with China and America: More Beijing*.

- Less Washington*.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 Storey, Ian. 2019. "Thailand's Military Relations with China: Mov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ISEAS Perspective*, No. 43, pp. 1-11.
- Swaine, Michael D. 2014.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China Leadership Monitor*, Vo. 44, No. 1, pp. 1-43.
- Tow, William T. 2015. "The United States and Asia in 2014: Reconciling Rebalancing and Strategic Constraints." *Asian Survey*, Vol. 55, No. 1, pp. 12-20.
- Takashi, Maiko. 2014. "India Naval Drill with Japan, U.S. Seen as Signal to China." *Japan Times* (July 30).
-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2021. "Foreign Direct Investment Statistics by Region." https://www.boi.go.th/index.php?page=statistics_oversea_invest (검색일: 2021.04.30.).
- The Diplomat. 2016/05/23. "China, Thailand Kick Off Military Exercise Blue Strike 2016."
- The Diplomat. 2015/05/07. "US Eyes Expanded Military Exercises with ASEAN Navies."
- The Diplomat. 2015/12/08. "US, Singapore Ink New Defense Pact."
- The Diplomat. 2017/12/06. "What's in the New US-Singapore Maritime Exercise in Guam?"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6. *Asia-Pacific Maritime Security Strategy*.
- Walt, Stephen M. 1987. *Origins of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 Wigell, Mikael. 2019. "Hybrid Interference As a Wedge Strategy: A Theory of External Interference in Liberal Democracy." *International Affairs*, Vol. 95, No. 2, pp. 255-275.
- Xinhuanet. 2019/11/17. "China, Thailand agree to enhance military cooperation."
- Yoo, Hyon Joo. 2015. "China's Friendly Offensive Toward Japan in the 1950s: The Theory of Wedge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sian Perspective*, Vol. 39, No. 1, pp. 1-26.
- Zhang, Yu. 2014. "Xi Defines New Asian Security Vision at CICA." *Global Times* (May 22).
- Zhao, Suisheng, and Xiong Qi. 2016. "Hedging and Geostrategic Balance of East Asian Countries toward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5, No. 100, pp. 485-499.

토론문: 미국의 반중국 안보네트워크와 중국의 썩기전략

이진영 교수(전북대)

- 본 연구는 “썩기전략”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갈등 관계를 학술적으로 면밀히 고찰하고 있음. 특히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이론과 실증사례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핵심개념으로 분석한 “썩기전략”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국가 간 동맹 및 연합 형성논리(세력 균형, 편승, 위험회피 등)와의 차별성을 통해 부상하는(rising) 혹은 패권국에 도전하는 국가의 전략을 경제/ 군사 및 안보분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분석 수준(level of analysis)의 일관성이 돋보임
- 연구의 핵심 질문 또한 ① 중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전략, ② 미국의 반중 견제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음
- 무엇보다 본 연구의 강점이며 독창성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비슷한 주제의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인 미국의 반중 견제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더불어 본 연구의 핵심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e.g.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체제 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함
 - : 예를 들어, 왜 중국의 썩기전략 사례로 ‘태국’을 설정하였는가?
 - : 태국 외에 다른 국가 사례는 없는가?
- 특히 ‘썩기전략’, ‘소다자주의’ 등의 개념 설명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 설명함으로써 개념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됨
 - : 썩기전략 사례: 미국의 안보 협력국 중 반중 안보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및 기여 수준이 낮거나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
 - :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그 동맹국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거나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례(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문제, 홍콩문제 등)
- 강대국 간의 경쟁과 연합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썩기전략과의 차별성을 이끌어내고 있음. 궁극적으로 썩기전략이 기존의 동맹이론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함. 더불어 썩기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례(기존연구)가 무엇인지 궁금함(4페이지~5페이지 썩기전략에 대한 설명과 연계)
- (제안) 연구목적/ 배경/ 함의 등에 대해 서론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나 이와 더불어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가 권위주의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권력공유 이론(Power-Sharing theory)을 중심으로

김소연 원생(한국외대)

1. 서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카리스마적 인물중심적 권위주의 체제가 목격되며, 대통령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1인의 권위자라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¹⁾ 스볼릭(Milan Svoblik)은 권위주의의 특징을 2가지로 규명하였다.²⁾ 첫째, 독재는 정치행위자들의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독립적 권위의 부족이며, 둘째, 갈등을 조절하는 궁극적 수단이 폭력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권위주의체제에서 갈등을 야기하는데 권위주의 통제(authoritarian control)의 문제와 권위주의 권력공유(authoritarian power-sharing)의 문제이다. 권위주의 체제에 있어 집권자는 권력공유를 통해 협력자들을 양산하고 권위를 지킨다. 그러나 집권자가 협력자로부터의 도전을 받게 되거나 혹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집권자의 정권 유지는 어렵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 안정³⁾에 있어서 집권자-협력자 간의 권력공유와 통제는 주요 기제라 볼 수 있다.

1946~2008년 사이에 하루 이상 집권한 316명의 독재자는 자연사, 선거, 지배집단의 투표, 혈통승계 등 비헌법적 방식으로 권력을 잃었다. 실제 축출 방법을 확인한 303명은 쿠데타(정권 내부자에 의한 제거) 205명(68%), 민중봉기 32명(11%), 민주화를 위한 대중의 압력 30명(10%), 암살 20명(7%), 외국의 개입 16명(5%) 등의 순으로 권좌에서 쫓겨났다. 실제로 이너 서클, 정부, 억압기구 등 정권 내부자의 쿠데타에 의해 제거되었다.⁴⁾ 이러한 경험적 결과로부터 권력의 통제와 공유가 체제 존망에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신생독립국으로 출범한 우즈베키스탄은 독립한 지 30여 년이 흘렀으나 장기간 권위주의 통치를 해 온 집권자의 사망에 따른 정권 교체를 제외하고는 리더십 변동은 전무하다. 초대 대통령인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1991년 독립 이후부터 2016년까지 약 25년간 장기 집권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해왔다. 카리모프 체제는 술탄적, 신세습주의적, 경성 권위주의 체

1) Kubicek. (1998). "Authoritarianism in Central Asia: Curse or cure?" *Third World Quarterly Journal* 19(1):29-43.; Melvin. (2000). *Uzbekistan : Transition to Authoritarianism on the Silk Road*. Amsterdam: Harwood Academic Press.. ; Spechler. (2008).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Central Asia : Uzbekistan under Authoritarianism*. London : Routledge.

2) Svoblik, M. W.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본 연구에서 권위주의 체제 안정이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제도적인 탄핵 시도와 비제도적인 암살, 쿠데타 기도 유무 등등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되어 집권자의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하여 정권이 교체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을 말한다.

4) Kendall-Taylor, A., & Frantz, E. (2016). *When Dictators Die*. *Journal of Democracy* 27(4): 159-171.

제 등으로 설명되어 왔으며,⁵⁾ 아드리안 트리처(Adrain Treacher)는 카리모프 정권 하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를 경성 권위주의로 평가하고 있다.⁶⁾ 2016년 9월 카리모프의 심장마비에 의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로의 리더십 변동이 발생하였다. 장기 집권자의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 상황이 초래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권력이 승계되었으며 미르지요예프 정권은 2021년 현재까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권력이 승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의 미르지요예프가 씨족 파벌 가운데 하나인 타슈켄트 파벌의 유력한 차기대권후보자들과의 권력공유(Power sharing)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⁷⁾

리더십 교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될 것인가는 논의가 있었으나, 미르지요예프 또한 카리모프 정권 시절 14년 간 국무총리에 재임한 카리모프 정권의 산물로 리더십 교체만 이루어졌을 권위주의적 집권은 지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 체제가 카리모프 시기에 비해 다소 연성화 되었으나, 권위주의 체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며,⁸⁾ 본 연구에서도 또한 동의하는 바이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 간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현상들을 스볼릭의 권위주의 권력공유 이론에 적용하여 보면,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 체제는 집권자가 권력집중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협력자의 권력에 대한 통제와 확고한 독재로의 이행에 성공하였기에 권위주의 체제 안정이 가능하였는가란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볼릭의 권력공유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권위주의 체제의 존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권력의 통제와 공유”를 집중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리더십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 체제 안정이 지속될 수 있었던 동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집권자-협력자(이하 “집권자-집권엘리트”⁹⁾)의 구조로, 구조 내에서 권력의 통제와 공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는지를 카리모프 시기와 미르지요예프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두 정권의 권력공유 구조가 공통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리더십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음을 말하겠다.

먼저,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의 동학을 알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특성인 “씨족 네트워크¹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신생 국가였던 우즈베키스탄이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을 당시 지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씨족에 기반을 둔 파벌과 집권자 간의 협력으로 보고 있으며,¹¹⁾ 집권자와 집권엘리트 간 후원-수혜관계의 기반으로 언급되어 왔다. 우즈베키스탄의 씨족네트워크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구소련 시기부터 중앙아시아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비공식적 권력관계의 중핵을 구성했으며 독립 이후에도 이는 불식되지 않았

5) 이지은. (2019).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 그리고 권위주의 향방.” 『한국중동학회논총』 40(1): 3.

6) Adrain Treacher. 1996. Political evolution in post-soviet Central Asia. *Democratization* 3(3): 306-327.

7) 성동기. (2019).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권의 권력 강화 방식 분석.” 『아시아리뷰』 9(1): 103

8) 이지은. (2019).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 그리고 권위주의 향방.” 『한국중동학회논총』 40(1): 1-24.

9) 연구에서는 “협력자”의 범위를 집권자가 임명할 수 있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연구 내에서는 “집권엘리트”라 칭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집권엘리트의 범주는 국가의 경제·정치·외교·안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총리, 부총리,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으로 한정하였다.

10) ‘씨족’이란 막스베버(Marx Weber)에 따르면,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족 또는 반(半) 유목민족들의 사회조직이다. 현대에 들어서 씨족은 자신들의 상호 정치적, 재정적, 전략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비공식 엘리트 집단으로 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씨족 네트워크’를 씨족 구성원들이 개인적 이익 추구 차원을 넘어, 씨족의 구성원으로써 공동의 정치적, 재정적, 전략적 이익을 위한 비공식적 정치 네트워크로 본다.

11) Collins, K. (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다.12) 국내정치지형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으로서 국가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주요 씨족 파벌은 타슈켄트 파벌과 사마르칸트 파벌이며, 그 외에는 타슈켄트의 동맹 파벌격인 페르가나 파벌, 사마르칸트의 동맹적 관계인 부하라 파벌이 있으며, 호레즘, 지작, 카라칼팍스탄 등이 있다.13)

그림 31 우즈베키스탄 씨족 분포



출처 : <https://globalriskinsights.com/2016/10/uzbekistan-death-islam-karimov/>

소련 붕괴 이후 권력의 공백이 발생한 신생 독립국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씨족 파벌은 카리모프 정권의 수립 및 국가 안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30여 년이 흐른 현재에도 집권자의 씨족 파벌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에 대한 권력공유 및 통제는 정권의 안정과도 직결되어 있다. 2016년 리더십 교체 또한 씨족 파벌의 전통과 구도를 활용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야예프 정권이 안정적으로 권력 강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14)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안정은 구조적으로 집권자와 씨족 기반 집권엘리트들과의 권력공유 구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특징인 씨족 네트워크가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하 집권자-집권엘리트의 권력공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라 보고, 리더십 변동 등의 정치적 이슈를 떠나 집권자는 씨족 파벌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와의 권력공유와 통제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음을 말한다.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 관련 연구15)는 대부분 씨족 네트워

12) 윤도원, 백우열. (2019).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권력승계 과정과 체제 안정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59(3): 265-307.
 13) 이재영 외. 2009.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63.
 14) 성동기. (2019).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야예프 정권의 권력 강화 방식 분석: 권위주의의 권력 공유 (Power-Sharing)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9(1): 113.
 15)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강봉구. (2008). “우즈베키스탄 민족국가의 발명? 우즈베크 종족-민족 정체성의 구성요소들.” 『한국정치학회보』 42(3): 415-437.; 박상남. (2011). “우즈베키스탄 국가 성격- 국가성, 국가능력, 신세습주의.” 『아시아문화연구』 24: 67-89.; 방일권. (2012). “비공식 제도로서 씨족정치 :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중소연구』 35(1): 241-269.; 성동기. (2004). “우즈베키스탄 씨족(Clan)의 순환적 발전형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6: 349-370.; 이지은. (2019).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 그리고 권위주의 향방.” 『한국중동학회논총』 40(1): 1-24.; Ilkhamov Alisher. (2007). “Neopatrimonialism, interest groups and patronage networks: the impasses of the

크의 기원, 카리모프 시기 중앙 정부 및 엘리트 중심의 씨족 네트워크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씨족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권력공유 이론을 통해 카리모프 정권과 미르지요예프 정권 하 씨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에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집권자-씨족 파벌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 권력공유 동학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두 정권 모두 공통적으로 씨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와의 권력공유에 있어 집권자들의 운용 방식이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 체제 안정성에 기여함을 밝히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각 정권별 집권자의 권력집중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집권엘리트 파벌정치 동학 분석을 통해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집권엘리트 파벌정치 동학은 그간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에 있어 파벌정치로 인한 이슈 및 시기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 비율을 다루는 것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집권자의 집권엘리트와의 권력공유 및 통제 방식이 변화해 온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를 밝힌다.

집권엘리트 파벌정치 동학을 연구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에 대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정보가 거의 없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 교차 분석을 통해 자료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와 관련된 논문 및 헌법, 법률 등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2차적으로는 각 부처별 웹사이트 및 집권엘리트 임면에 관한 최신 동향을 담은 현지뉴스 등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집권자의 권력집중화 과정, 시기별 집권자의 집권엘리트와의 권력공유 및 통제 관련 조치와 파벌정치 동학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이다.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씨족 네트워크의 개념을 알고,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인 권력공유이론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카리모프 시기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 동학을 살펴본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카리모프 시기 집권 초기인 1990년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대통령 1인으로서의 권력 집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2001년, 국내외 민주화운동의 열기로 권위주의체제 붕괴 위험이 만연했던 2005년 경 발생한 반정부 시위 안디잔 사태와 그 이후 대통령 친위정당 자유민주당이 첫 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으로 발돋움한 2007년 직후인 2008년 전후의 정부 주요 부처에서의 씨족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 간의 파벌정치 동학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집권자의 집권세력과의 권력 공유 및 통제가 이루어진 과정을 분석하고, 카리모프 시기 집권자-집권엘리트 간 권력공유 구조의 특징을 밝힌다.

제 4장에서는 미르지요예프 시기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를 살펴본다. 해당 장에서는 리더십 교체 전후인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1년 현재의 정부 주요 부처에서의 씨족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 간의 파벌정치 동학을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각 정권별 사례분석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타나는 집권자의 집권엘리트와의 권력 공유 및 통제 과정이 개인에 의한 현상이 아닌,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제 5장은 결론이다. 결론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는 집권자가 씨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와의 권력 공유 및 통제 통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권력공유의 구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음을 주지한다.

2. 이론적 배경

governance system in Uzbekistan." *Central Asian Survey*, 26(1): 65-84.; Markowitz. (2012). "The sub-national roots of authoritarianism: Neopatrimonialism and territorial administration in Uzbekistan."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20(4): 387-408. 등.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지속성 혹은 안정성에 관한 기존의 대다수 선행연구들의 시간적 범주는 카리모프시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주요 동인을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된 정치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¹⁶⁾, 강력한 이슬람정책을 통한 종교 균열의 정치화¹⁷⁾,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¹⁸⁾, 씨족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후원-수혜관계 등이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 다룬 씨족 네트워크는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의 특징인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 후원주의 네트워크(patronage networks), 술탄주의(Sultanism)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공통적인 개념이다.

씨족 네트워크는 씨족 간의 유기체를 말하며 씨족의 특징은 도당(Clique)이라 볼 수 있다. 도당은 연결된 사람들 간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한편, 구성원들 간의 공동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는 다중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비공식집단인 씨족의 국가에 대한 침투 정도가 강해지면 씨족 국가(clan state)라 할 수 있으며, 씨족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이상의 국가 기능이 일부 씨족에 점유되어 있고 정부의 의제보다는 특정 씨족의 의제에 따라 국가 자산과 자원이 통제된다.¹⁹⁾ 우즈베키스탄 정치 지형에서는 동향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에 기반한 씨족 네트워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전통을 말살하려는 소련의 압제에도 사라지지 않고 성장해왔다. 때문에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된 80년대 중후반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씨족 파벌들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주요 씨족 파벌인 사마르칸트파와 타슈켄트파에 국가 기능이 점유되어 있던 씨족 국가라 볼 수 있다. 즉, 9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은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등의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있어서 공식적인 제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후원주의와 씨족 등의 비공식적인 제도들과 조직들이 중요하게 작동하던 것이다(Gleason 2002: 9).²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카리모프 정권의 제도 개혁을 통한 중앙집권화 및 지방정치세력 약화가 이루어지면서 씨족 네트워크는 집권자인 대통령과 집권엘리트 집단의 권력공유 구조를 형성하는 특징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를 일하모프(Alisher Ilkhamov)는 ‘후원주의적 네트워크(patronage networks)’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후원주의적 네트워크가 집권자와 집권엘리트 간의 유대와 협력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집권자와의 후원주의적 관계를 통해 씨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을 때, 집권자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정권 내부자 도전에 의한

16)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와 정치시스템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Edel, M., & Josua, M. (2018). How authoritarian rulers seek to legitimize repression: framing mass killings in Egypt and Uzbekistan. *Democratization*, 25(5): 882-900. ; March, A. F. (2003). State ideology and the legitimation of authoritarianism: The case of post-Soviet Uzbekistan 1.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8(2): 209-232. ; Omelicheva, M. Y. (2016). Authoritarian legitimation: assessing discourses of legitimacy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Central Asian Survey*, 35(4): 481-500. ; 이영형. 201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중소연구* 39(2): 261-288.

17)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지속성과 이슬람정책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Khalid, A. (2003). A secular Islam: nation, state, and religion in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35(4): 573-598. ; Koch, N. (2011). Security and gendered national identity in Uzbekistan. *Gender, Place & Culture*, 18(4): 499-518. ; Peyrouse, S. (2016). Does Islam Challenge the Legitimacy of Uzbekistan’s Government?. ; 이선우. 2016.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부의 이슬람 정책: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 *중소연구* 40(3): 269-201.

18)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지속성과 정치엘리트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Levitsky, S., & Way, L. A. (2002). Elections without democracy: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13(2): 51-65.; 신범식. 2018. “탈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의 국민국가 건설과 이슬람.” *세계지역연구논총* 36(2): 163-190. 이재영 외. 2010.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9) 엄구호. (2009). “중앙아시아 민주주의와 씨족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27(3):193.

20) Gleason, Gregory. (2002). The Politics of Counterinsurgency in Central Asia, *Problems of Post Communism*, 49(2): 9.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르지요예프의 리더십 교체 이후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스볼릭(Svolik)의 권위주의 권력공유이론(Power-Sharing Theory)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권의 권력 강화 방식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씨족에 기반한 지역 파벌의 전통과 구도를 활용하여 권력공유 구조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²¹⁾ 본 연구에서 또한 집권자는 씨족에 기반한 지역 파벌의 전통과 구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권력 강화 및 집권엘리트 통제를 해왔음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미르지요예프의 정권 하에서의 씨족에 기반한 지역 파벌 간의 경쟁 구도에 의한 이슈들을 분석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집권세력 간의 권력공유 방식을 밝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권력공유는 미르지요예프의 권력승계에서만 나타난 특징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카리모프, 미르지요예프 정권의 집권자-집권엘리트 구조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두 정권 모두에서 집권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씨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와의 권력 공유 및 통제를 통해 체제 안정을 가능케 하였는가를 알기위한 심층적인 분석이 다소 미진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룰 카리모프 시기와 미르지요예프 시기의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분석이 지니는 학문적 필요성이기도 하다.

스볼릭은 권력공유이론의 개념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집권자와 그의 협력자들 간에 벌어지는 파워게임을 의미한다.²²⁾ 집권자는 협력자들을 제압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과 기회주의를 가지고 있다. 반면 협력자들은 집권자의 기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위협한다. 집권자가 권력전환을 시도하면, 협력자들은 모반을 실행해야한다. 그러나 협력자들은 모반의 실패 위험과 집권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모반을 주저한다. 협력자들은 모반의 실패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집권자가 권력공유를 지속할지 포기할지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자가 협력자의 제지를 받지 않고 몇 차례 권력을 얻는 데 성공하면, 집권자는 협력자가 모반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권력을 축적하고, 개인독재로 이행한다.

권위주의체제 하 권력공유에서 개인독재로 이행하는 과정을 경쟁적 독재(contested autocracy)와 확립된 독재(established autocracy)라는 모델로 설명한다. 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이행은 권위주의 권력공유에서 개인독재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경쟁적 독재에서 협력자는 집권자의 기회주의에 대응해서 모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반면 확립된 독재는 집권자가 권력집중에 성공함으로써 더 이상 협력자에게 위협당하지 않는다. 확립된 독재에서 협력자는 집권자의 기회주의를 막을 수 없고, 집권자는 내부자에 의해 제거될 가능성이 낮고, 더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집권자는 협력자들로부터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지만, 추후 집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자와의 약속을 위반하거나 협력자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모반을 실행한다면 정치적 불안정성이 야기된다. 권력 공유 과정에서 집권자가 협력자들보다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나가면 궁극적으로 확립된 독재로의 이행에 성공하게 되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권력공유이론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과정은 1) 협력단계(집권자-집권엘리트 간 권력 공유), 2) 갈등단계 (집권자는 권력전환을 시도하며 협력자들의 권력 통제 시도), 3) 권력독점단계(집권자의 권력집중화 성공 및 협력자 축출 다수 성공)를 통해 확립된 독재로의 이행이 성공할 시, 집권자는 권위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정권과 미르지요예프 정권은 게디스의 권위주의체제 유형화에 따르면 일당-개인혼합 권위주의 체제(personalist-single party hybrid authoritarian regime)라 볼 수 있

21) 성동기. (2019).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권의 권력 강화 방식 분석: 권위주의 권력 공유 (Power-Sharing)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9(1):101-128.

22) Svolik, M. W. (2009).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477-494.

다.²³⁾ 따라서 두 정권 모두에서 대통령들은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권력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확립된 독재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권력공유이론을 중심으로 각 정권 별 집권자-집권엘리트 간 권력공유 구조 동학을 분석함으로써 집권자는 집권 초기의 경쟁적 독재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여 확립된 독재로 이행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 체제 안정은 씨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에 대한 집권자의 권력공유와 통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

3. 사례 연구 1 : 카리모프 시기 : 집권자-씨족 파벌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신생 국가들이 1992년 1월부터 체제전환 정책을 본격화했고, 우즈베키스탄이 선택한 체제전환 정책은 점진적 모델이었다.²⁴⁾ 체제전환의 점진적 모델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구체화되었다. 점진적 체제전환 정책 하에 경제부문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폐쇄적 경제정책을 펼쳐왔는데, 그 이면에는 독립 초기 국가 경제자원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씨족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지방 정치 세력의 대외개방 정책에 대한 견제도 있었다. 한편, 신생국 국가 건설이라는 환경 속에서 정권안정은 국가의 존망에 필수적 과제였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정치엘리트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카리모프 대통령의 역할이 증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엘리트는 씨족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씨족 네트워크는 오랜 전통 속에서 발전해 온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특징인 씨족 네트워크는 주요 엘리트 집단 구성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씨족 파벌간의 견제와 반목이 지속되어 왔다. 1980년대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씨족 파벌 간 경쟁구도는 더욱 격화되었으며, 주요 파벌인 사마르칸트파와 타슈켄트파의 대립이었다. 1989년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인 카리모프는 당시 사마르칸트 파벌의 지도자였던 이스마일 주라베코브(Ismail Jurabekov)의 정치적 지지로 당 제 1서기가 될 수 있었으나, 여전히 라이벌 파벌인 타슈켄트파와 타슈켄트 파의 수장인 샤카룰라 미르사이드프(Shukrullo Mirsaidov)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1) 협력 : 카리모프 대통령-사마르칸트 파벌

소련 해체 후 카리모프는 독립 과정에서 안정을 강조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 건설과 안정을 강조하고, 자신을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전통과 맥을 잇는 국가 지도자로 각인시켰다. 사마르칸트파는 절대적으로 카리모프를 지지했고, 타슈켄트파를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내 다른 지역 및 파벌들도 카리모프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결국 카리모프는 사마르칸트파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1991년 첫 대통령 선거에서 87.1%의 득표율로 제1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타슈켄트 파의 미르사이드프는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10월 미르사이드프

23) 게디스는 권위주의 체제를 개인(personalist), 군부(military), 일당(single-party) 권위주의의 세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Geddes, B. (1991). Paradigms and sand castles in comparativ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olitical Science: Looking to the Future*, 2: 45-75.

24) 점진적 체제전환 모델이란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국가들의 체제전환 방식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한다. 점진적 체제 모델을 수용한 국가의 주요 정책 특징은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역할과 국민에 대한 일정한 사회보장의 제공을 상정한다. 따라서 점진적 체제전환 모델을 수용한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점진적인 체제 전환방식을 수용한다. 구소련 국가들의 체제전환 모델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하시오. 이영형, 김영진. (2015). “러시아 체제전환과 통제되지 않은 자본 - 체제 전환기(1992-1998) 마피아 활동을 중심으로 -.” 『오토피아』30(1): 237-268.

는 타슈켄트파 소속 인민회의 의원들과 함께 카리모프의 노선을 비난하며 사임을 요구하며 정치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로 돌아간 타슈켄트 파벌 주도의 정치 쿠데타로 인해 1992년 1월 8일 부통령직에 있던 미르사이드프는 해임되고, 카리모프는 부통령직을 잃었다.

[표 1] 1992년 카리모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

직급	집권 엘리트	출신 파벌
대통령	카리모프	사마르칸트
총리	압둘하심 무탈로프(Abdulhashim Mutalov)	타슈켄트
제1부총리	우린바예프	타슈켄트
부총리	카임 하쿨로프(Kayim Hakulov)	호레즘
부총리	라힘 라자보프(Rahim Rajabov)	부하라
부총리	바티요르 하미도프(Bahtiyor Hamidov)	타슈켄트
부총리	아나톨리 보즈넨코((Anatoli Voznenko))	타슈켄트
부총리	무함마딘 카라바예프(Muhammadjan Karabayev)	타슈켄트
부총리	오키르 술탄노프(Otkir Sultanov)	타슈켄트
부총리	카짐 톨라가노프(Kozim Tolaganov)	타슈켄트
국방부 장관	루스탐 아흐메도프(Rustam Akhmedov)	페르가나
재무부 장관	에르킨 바키보예프(Erkin Bokiboyev)	타슈켄트
내무부 장관	자키르 알마토브(Zokir Almatov)	사마르칸트
국가안보국장(SNB)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	타슈켄트

출처 : 이재영 외. (2010).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14 참조하여 재구성

하지만 여전히 카리모프는 정권 안정에 있어 타슈켄트 파벌의 정치적 도전을 염려하였다. [표 1] 카리모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 총 14명 가운데 9명이 타슈켄트 파벌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슈켄트 파벌의 동맹 파벌인 페르가나 인사 1명을 포함하면 10명의 타슈켄트 세력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군사, 경제, 안보 등 정권 안정에 있어 주요한 보직의 수장들 모두 타슈켄트 파벌인 것을 보면 당시 타슈켄트 파벌의 위용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다. 카리모프는 타슈켄트 파들을 부총리 및 주요 장관직에 임명하였으나, 차관직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점차 사마르칸트 파벌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⁵⁾

한편, 카리모프는 타슈켄트 파벌 및 주요 파벌로부터의 독립적인 권위 수립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특징이나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되는 파벌, 연고주의 정치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건설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국가기구의 권위 확립을 최우선적 국가 과제로 내세웠다. 1992년 카리모프는 대통령과 국가기구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으로는, 국가가 지방정치세력을 통할할 수 있는 호키야트(Hokimyat) 시스템을 만들고,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닐 수 있게 하였다. 지역에 기반을 둔 씨족 파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중앙에 미치는 씨족 파벌의 영향력을 감축시키는 것이었다.

호키야트 시스템에 따라, 12개의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Hokim)들과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같은 거대 도시의 시장들을 모두 대통령이 임면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재량권은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파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는 인사들을 수시로 교체하며 집권자-씨족 파벌 간의 경쟁이 아닌, 집권자-씨족 파벌 간 충성 및 후원 관계로 변화시켜 대통령 1인에 대한 충성심을 고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95년 압둘하심 무탈로프(Abdulhashim Mutalov) 총리를 비롯해 타슈켄트 파벌 인사들을 파면하고, 사마르칸트 파벌을 정부

25) 이재영 외. (2010).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5.

주요 관직에 임명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사마르칸트 파벌 중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연유에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증대시킨 제도적 개혁²⁶⁾과 더불어 사마르칸트 파벌의 수장인 이스마일 주라베코프의 적극적인 타슈켄트 파벌 응징과 카리모프지지 등 사마르칸트 파벌의 협력이 있었다.²⁷⁾

[표 2] 2001년 카리모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

직급	집권 엘리트	출신 파벌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사마르칸트
총리	오토키르 술타노프(Otkir Sultanov)	타슈켄트
제1부총리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타슈켄트
부총리	딜바르 구홀로모바(Dilbar Gulyamova)	사마르칸트
부총리	아나톨리 이사예프(Anatoliy Isayev)	사마르칸트
부총리	우크탐 이스마일로프(Uktam Ismailov)	사마르칸트
부총리	하미둘라 카라마토프(Hamidulla Karamatov)	사마르칸트
부총리	투럽 콜토예브(Torup Kholtoyev)	타슈켄트
부총리	아짐잔 무히디노프(Azimjan Mukhiddinov)	사마르칸트
부총리	발레리 아타예프(Valery Otayev)	부하라
부총리	미라브로르 우스마노프(Mirabror Usmonov)	사마르칸트
부총리	루스탐 유누소프(Rustam Yunosov)	페르가나
부총리	루스탐 아흐메도프(Rustam Akhmedov)	페르가나
국방부 장관	카디르 굴로모브(Kadyr Gulamov)	타슈켄트
재무부 장관	마마리조 노르무라도브(Mamarizo Normuradov)	사마르칸트
내무부 장관	자키르 알마토프(Zokir Almatov)	사마르칸트
국가안보국장(SNB)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	타슈켄트

출처 : 이재영 외. (2010).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17 참조하여 재구성

[표 2]의 2001년 카리모프 정부 집권엘리트를 보면 독립 초기 정권에 위협이 될 정도로 주요 보직에 포진해있던 타슈켄트 파벌은 거의 사라지고, 사마르칸트 파벌이 대거 포진해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7명의 주요 집권엘리트 가운데 9명이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이며, 사마르칸트 동맹 파벌인 부하라 파벌 출신 1명을 포함하면, 총 10명의 사마르칸트 세력인 것이다. 타슈켄트 파벌 출신인 오토키르 술타노프(Otkir Sultanov)는 대외적으로 타슈켄트 파벌 출신이었을 뿐, 총리로써의 실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한다.²⁸⁾ 국가안보국장인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 또한 대표적이 타슈켄트 파벌 출신 인사로써 우즈베키스탄 독립 후부터 카리모프 정권이 막을 내릴 때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지녔었으며, 현(現)대통령인 미르지요예프와 대권을 경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타슈켄트 파벌 가운데 카리모프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한 사람으로, 안보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직의 장으로 카리모프 정권 안정에 중추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카리모프는 2000년대 초까지 사마르칸트 파벌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 초기 주요 행정부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던 타슈켄트 파벌을 교체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얻는 한편, 공식에 사마르칸트 파벌로 대체함으로써 권위주의 정권 하 정치적 안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26)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 신생독립국으로 효율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다는 목적 하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되어 왔다. 1992년 12월 8일 채택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우즈베키스탄 헌법 제 1조). 헌법은 1992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오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확대시켜왔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은 군 통수권, 법률거부권, 국가비상사태 선포권, 총리·각료 임명권, 지방지도자 임명권 등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전반 조직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7) RFERL. "Analysis: Uzbek Eminence Falls From Grace." <https://www.rferl.org/a/1057594.html> (검색일:2021년 4월 30일)

28) 이재영 외. (2010).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1

2) 집권자로의 권력전형 및 씨족 파벌 통제 : 카리모프 대통령의 사마르칸트 파벌 축출

카리모프는 사마르칸트파와의 협력으로 정부 주요 관직에서 정권지지 세력을 등용하는 한편, 2000년대 들어 입법부 구조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개혁하면서 씨족 파벌에 대한 통제와 의회 내 친 카리모프계 인사들로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2002년 1월 27일 우즈베키스탄은 의회구조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다.²⁹⁾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가 더 이상 출마하지 못하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었다. 이를 통해 카리모프는 입법부 구성에 대한 지역에 기반을 둔 씨족 파벌들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고, 국가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단원제 하에서 지방정치세력인 주지사들과 측근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한편, 양원제로 개편하면서 카리모프는 자신의 정치 후계세력들의 인재 풀을 높임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양대 파벌(사마르칸트 파, 타슈켄트 파)의 영향력을 대통령이 약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³⁰⁾ 이처럼 카리모프는 중앙집권화를 2000년 전후 마무리하였다. 사마르칸트 파벌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주요 관직 및 지방 주요 관직에서의 타슈켄트 파벌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입법부에서는 친 카리모프 세력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위주의 통치 기반을 강화해 온 것이다.

한편, 씨족 파벌들의 카리모프 정권에 대한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2월 타슈켄트 정부청사 부근에서 카리모프를 겨냥한 폭탄테러가 발생하였었는데, 당시 우즈베크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소행이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해당 테러 사건의 배후는 사마르칸트 파벌의 실세이자, 카리모프의 대통령으로의 부상 및 정권 공고화에 가장 큰 조력자였던 이스마일 주라베코프였다는 주장이 있다.³¹⁾ 1999년 2월 자신의 지역파벌로부터 폭탄테러를 당한 이슬람 카리모프는 타슈켄트 지역 파벌과 연합하여 이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사마르칸트 파벌에 대한 그의 보복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거 대상은 주요 사마르칸트 파벌 인사들이었다. 카리모프는 2004년 타슈켄트 파벌 실세이자 국가안보국장인 루스탐 이노야토프를 통해 사마르칸트 파벌 리더인 이스마일 주라베코프를 범죄 혐의로 대통령 고문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내무부 장관 알마토프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였다.³²⁾ 이후 2005년 반정부 시위인 안디잔 사태 발발 이후 사마르칸트 파벌을 포함한 씨족 파벌 약화를 위한 인사 개혁이 시작되었다.

2005년 5월 13일 안디잔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는 독립 이후 카리모프 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다. 안디잔 사태는 페르가나 지방의 경제 낙후와 취업률이 저조함에 따라 불만이 터져 나온 저항사건으로, 카리모프는 안디잔의 봉기에 대해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단시간에 사건을 무마시켰지만, EU와 서방으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자로 비난 받았다.³³⁾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테러와 안디잔 사태 등은 주요 씨족 파벌 인사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카리모프 정권의 안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안디잔 사태를 명목으로 카리모프는 사마르칸트 파벌 실세인 알마토프를 해임하였다. 또한 2005년 11월 타슈켄트 파벌이자 국방부 장관 카디르 굴로모브(Kadyr Gulamov)를 사기, 부패 및 공직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장관직에서 해임시켰다. 이를 통해 정권 안보와 직결되는 내무부, 국방부 등에서의 인사 개혁을 단행하고, 주요 씨족

29) 이영형. (201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카리모프 (I. 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 과정, 결과, 의미.” 『중소연구』 39(2): 270.
 30) 이재영 외. (2010).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5.
 31) Naumkin, V. V. (2003). *Militant Islam in Central Asia: The Case of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37.
 32) RFERL.2004. “Uzbekistan: Karimov Appears To Have Political Clans Firmly In Hand.” <https://www.rferl.org/a/1070977.html> (검색일 : 2021년 4월 30일)
 33) Human Right Watch. 2005. “Bullets Were Falling Like Rain-The Andijan Massacre, May 13, 2005” <https://www.hrw.org/report/2005/06/06/bullets-were-falling-rain/andijan-massacre-may-13-2005> (검색일 : 2021년 4월 30일)

파벌의 핵심인사를 제거하였다.

3) 권력독점 단계 : 카리모프 대통령 1인 독재체제 구축 성공

카리모프는 테러로 인한 ‘계산된’ 비상시국을 주도하고 실제로 ‘안디잔 사태’라는 상당 규모의 반정부 시위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안보 및 치안 이슈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의 수호자와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³⁴⁾ 특히 안디잔 사태를 통해 카리모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였지만 정권 안정에 위협이 될 만큼 성장한 사마르칸트 파벌을 타슈켄트 파벌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파벌 간 경쟁을 십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안정성을 지속시켜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씨족 파벌들은 대통령과의 권력경쟁에서 점차 열위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카리모프는 2005년을 전후한 시점에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³⁵⁾

한편, 안디잔 사태를 통해 정부 주요 관직에서 씨족 파벌들의 영향력이 약화는 집권자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여 씨족 파벌 세력 균형을 조정하는 조정자에서 개인에 충성하는 씨족 파벌들로 주요 집권엘리트들을 재편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권력독점 집권자로 변화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카리모프는 2003년 친위정당 자유민주당(LPD: Liberal Democracy Party)³⁶⁾을 창당하여 자유민주당을 입법부 내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활용하려 하였는데, 자유민주당 당원들을 여타 정당에 비해 국회 진출이 쉽도록 정치적 프리미어를 제공하여 친위여당 소속의 인사들이 의회 내 진입 폭이 넓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 개인에 충성하는 정치엘리트들만이 주요 집권엘리트로 부상할 수 있었고, 입법부 내 다수의원들 또한 친 카리모프 인사들로 구성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법률들이 입법화될 수 있었다.

「표 3」 2008년 카리모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

직급	집권 엘리트	출신 파벌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사마르칸트
총리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사마르칸트
부총리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타슈켄트
부총리	압둘라 아리포브(Abdullah Aripov)	타슈켄트
부총리	스베틀라나 이나모바(Svetlana Inamova)	타슈켄트
부총리	노디르콘 카노프(Nodirkhon Khanov)	페르가나
부총리	에르가쉬 샤이스마토프(Ergash Shaismatov)	타슈켄트
국방부 장관	루슬란 미르자예프(Ruslan Mirzayev)	-
재무부 장관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타슈켄트
내무부 장관	바호디르 마틀루보브(Bahodir Matlubov)	사마르칸트
국가안보국장(SNB)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	타슈켄트

출처 : 2008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조직도(Соста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참고하여 재구성.

2007년 세 번째 대선에서 또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이루어진 개각에 따른 주요 집권엘리트는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3]에서처럼, 카리모프는 기존의 타슈켄트 파벌 혹은 사마르칸트 파벌 중심의 내각 구성이 아닌, 타슈켄트 파벌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비슷한 점유와 더불어 자신에 충성하는 정치엘리트만을 주요 집권엘리트로 남겨두었다. 현(現) 대통령인 샤브캣 미르지요예프는 카리모프가 대통령 우위의 권력 구조를 완성한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총리직을 맡고 있었으며, 안디잔 사태 진압의 주요 공신이였다. 또한, 국가안보국의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는 타슈켄트 파벌 출신이나, 친 카리모프계 인사로 리더십 교체가 발생했던 2016년까지 카리모프의 권위주의체제

34) 성동기. (2012). “우즈베키스탄 정권 안정화 정책 분석 : 유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차세대 엘리트 양성을 중심으로.” 『외국학 연구』 19(0): 265.
 35) 이선우. (2016).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부의 이슬람정책: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 『중소연구』 40(3):269-301.
 36) 친위정당인 자유민주당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하원의원직에서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우위를 점해왔다.

정권 유지에 있어 일등 공신이라 볼 수 있다. 즉, 2008년 카리모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들 보면 카리모프는 씨족 파벌의 영향력에 따라 정권의 존망이 우려되던 과거와 달리 집권자에 충성하는 인사들로만 집권엘리트를 구성함으로써 집권자의 권력독점화단계에 성공하였다 볼 수 있다.

이처럼 카리모프는 파벌 간 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라이벌 파벌로 하여금 정권에 도전하는 씨족 파벌을 응징하는 한편, 대통령 1인에 권력을 집중화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전반적인 씨족 파벌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카리모프 정권 초반에는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이 막대한 씨족 파벌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와의 후원-수혜 관계로 갈등상황 속에서 정권의 안정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카리모프는 권력집중화를 통해 씨족 파벌로부터의 도전이라는 정권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확립된 독재로의 이행을 성공, 권위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3. 사례 연구 2: 미르지요예프 시기 집권자-씨족 파벌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

카리모프 대통령이 2016년 9월 2일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을 맞이하게 되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권력을 집중화시켜 지역에 기반을 둔 씨족 파벌들을 통제하여 정치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카리모프 개인에 권력이 집중화 되어 있는 구조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 주요 씨족 파벌, 즉 타슈켄트 파벌과 사마르칸트 파벌 간의 갈등을 악화시켜 승계 과정 속에서 집권엘리트 내부 분열 가능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Ambrosio, T. 2015).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통령 사망 직후, 당시 총리이자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의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았으며 2016년 12월 4일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 미르지요예프 정권은 정권에 대한 도전 없이 안정적으로 집권하고 있으며, 리더십 변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미르지요예프가 집권 이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리모프가 취했던 집권엘리트들과의 권력 공유(Power Sharing)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1) 협력 : 미르지요예프 -타슈켄트 파벌

먼저, 차기 대권주자로 논의되었던 인사는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의 미르지요예프 뿐만이 아니었다. 타슈켄트 파벌의 주요 실세인 부총리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와 국가안보국장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 또한 유력한 대권주자로 논의되고 있었다. 미르지요예프, 루스탐 아지모프, 루스탐 이노야토프는 카리모프 정권의 실세였으며, 루스탐 아지모프의 경우 카리모프 시기 실질적 2인자였다. 대권을 둘러싸고 우즈베키스탄 정치 지형에서는 다시금 사마르칸트 파벌과 타슈켄트 파벌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37) Ambrosio, T. (2015). Leadership succession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Regime survival after Nazarbayev and Karimov. *Journal of Balkan and Near Eastern Studies*, 17(1): 49-67.

「표 4」 2016년 미르지요예프 권한 대행 시기 주요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

직급	집권 엘리트	출신 파벌
대통령 권한대행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사마르칸트
총리	압둘라 아리포프(Abdulla Aripov)	타슈켄트
제1부총리	아칠바이 라마토프(Achilbay Ramatov)	호레즘
부총리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타슈켄트
부총리	조이르 미르자예프(Zoir Mirzayev)	사마르칸트
부총리	굴롬존 이브라기모프(Gulomzhon Ibragimov)	타슈켄트
부총리	아드함 이크로모프(Adham Ikromov)	타슈켄트
부총리	울루베크 로지쿨로브(Ulubek Roziqulov)	타슈켄트
부총리	탄질라 나르바예바(Tanzila Norbaeva)	페르가나
국방부 장관	쿠불 베르디예프(Qobul Berdiyev)	타슈켄트
재무부 장관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타슈켄트
내무부 장관	아담 아흐멧바예프(Adham Ahmedbaev)	타슈켄트
국가안보국장(SNB)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	타슈켄트

출처 : 2016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조직도(Соста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참고하여 재구성.

[표 4]를 통해 2016년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집권엘리트 파벌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타슈켄트 파벌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타슈켄트 파벌 출신의 인사가 차기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이,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 미르지요예프보다는 더욱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열세에 있던 사마르칸트 파벌은 미르지요예프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다. 2011년 헌법 개정 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직은 상원의장이 맡아야 한다.³⁸⁾ 그러나 당시 상원의장이었던 니그마틸라 울다셰프(Nigmatilla Yuldashev)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경륜이 많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미르지요예프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에 추천한다고 제안하였고 상하원 합동결의로 미르지요예프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게 되었다.³⁹⁾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사망 이후 2016년 9월 28일 열린 주요 씨족 대표 회의에서 미르지요예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카리모프가 지녔던 권력에 비해 다소 축소 될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⁴⁰⁾ 이는 타슈켄트 파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가 대통령직에 사마르칸트 파벌 미르지요예프를 추대하는 대신, 권력공유를 사전 합의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2016년 12월 대선에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아지모프는 출마 포기 선언,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요예프를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먼저 타슈켄트 파벌 출신의 루스탐 이노야토프는 카리모프 시기 오랜 기간 국가안보국장을 역임하며, 이너 서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령이었기에 대권 주자로 나서기 보다는, 이노야토프는 차기 대통령 승계 과정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며 막후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⁴¹⁾ 그는 경쟁 파벌 출신 미르지요예프의 정치적 스승이었으며, 우호적인 관계이며 미르지요예프와 이노야토프의 관계는 카리모프와 그의 킹메이커 주라베코프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분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미르지요예프와 비슷한 연령대이며, 타슈켄트 파벌에서 강력하게 지지하였던 아지모프 또한

38)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96조에 의해, 현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권한은 상원 의장에게 이양되며, 상원 의장은 3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39)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сообщение о совместном заседани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ы и Сената Олий Мажлис 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Information about a joint session of the Legislative Chamber and the Senate of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016년 9월 8일, <https://www.gov.uz/ru/news/view/7246> (검색일: 2021년 05월 01일)
 40) REUTERS. "Exclusive: New Uzbek leader to share power due to clan rivalrie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president-exclusive-idUSKCN12D1ZU> (검색일: 2021년 4월 30일)
 41) 이지은. (2016). "초대대통령 카리모프의 서거와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투르크경제권』17(2): 9.

차기 대권 후보에서 자발적으로 출마 포기를 선언하였다. 미르지요예프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여 정치적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 하는 등 기존의 정치 시스템 및 집권엘리트와의 현상 유지를 암시하였고, 2016년 12월 자유민주당 대선 후보 미르지요예프는 88.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⁴²⁾ 이러한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 권력 승계 과정에서 미르지요예프는 이노야토프, 아지모프로 대표되는 타슈켄트 파벌 실세들을 포함한 씨족 파벌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들과의 합의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집권자로서의 권력전환 및 씨족 파벌 통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타슈켄트 파벌 축출

미르지요예프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경제 자유화 및 정치 개혁 등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폐쇄적인 정책을 취하였던 카리모프 정권과는 상이한 통치를 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정치 개혁 하에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을 천명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본인에 위협이 되는 정적들을 견제하고, 중앙 주요 부처에서 제거해나가기 시작하였다.⁴³⁾ 즉, 집권자의 권력집중화 및 협력자 제거가 시작된 것이다. 미르지요예프는 가장 견제해야 할 대상이었던 타슈켄트 파벌의 아지모프를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재무부 장관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미르지요예프의 소속 정당이자 정치적 기반인 자유민주당의 당 대표인 압둘라 아리포브(Abdulla Aripov)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압둘라 아리포브는 타슈켄트 파벌 출신이나, 미르지요예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그의 친위정당인 자유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 점 등은 그가 친 미르지요예프 인사임을 알 수 있다.⁴⁴⁾

또한, 미르지요예프 정권의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 12월 20일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에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의 자키르 알마토프⁴⁵⁾를 임명했다.⁴⁶⁾ 미르지요예프는 타슈켄트 파벌의 실세인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의 정적인 알마토프를 등용함으로써, 정적들을 제거하고 단기간 내에 권력집중화를 완료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 공식 석상에서 또한 국가안보국의 운용원리가 구시대적이며,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 개편이 필수적이며, 국가안보국의 권한 축소를 고려해보아야 함을 주지하였었다.⁴⁷⁾ 그 일환으로 2017년 1월 3일에 미르지요예프는 최종적으로 반부패법에 사인을 하였고, 그는 본격적으로 이노야토프가 수장으로 있는 국가안보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돌입하였다. 반부패위원장이 된 알마토프는 2017년 5월 29일 아지모프를 부총리직에서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르지요예프는 언론을 동원하여 아지모프를 비난하는 급여 생활자들과 연금 생활자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보도하도록 하였다.⁴⁸⁾ 이어 그는 아지모프가 경제관료 부패의 참상이라는 명

42) 2016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에 관한 OSCE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5일 대통령 선거는 진정한 경쟁이 없었으며, 제한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선거가 진행되어 불공정한 환경이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6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 진행된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불공정·비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가 아닌, 형식적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권위주의체제의 사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이너 서클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합의가 대통령으로의 부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43) Bowyer, A. C. (2018). Political reform in Mirziyoyev's Uzbekistan: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67.

44) RFERL. "How Shavkat Mirziyoev Became Uzbekistan's Supreme Leader." <https://www.rferl.org/a/uzbekistan-mirziyoev-consolidation-of-power/29016113.html> (검색일 : 2021년 5월 1일).

45) 자키르 알마토프는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으로, 카리모프 정권 초기 내무부장관을 역임했었다. 그러나 그는 1999년 카리모프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정치권에서 떠나 있었으며, 당시 알마토프를 해임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사가 타슈켄트 파벌출신이자, 국가안보국장을 오랜기간 역임해온 루스탐 이노야토프이다.

46) SOFUZ. "Зокир Алматов ҳукумат ишига қайтарилди" <https://sof.uz/post/zokir-almatov-hukumat-ishiga-qaytarildi> (검색일 : 2021년 5월 1일).

47) eurasianet. "Uzbekistan: President Fires Powerful Security Services Chief." <https://eurasianet.org/uzbekistan-president-fires-powerful-security-services-chief> (검색일 : 2021년 5월 1일).

48) 성동기. (2019).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권의 권력 강화 방식 분석: 권위주의 권력 공유

목으로 그를 해임하였다.⁴⁹⁾

주요 정적들의 영향력을 점차 제거해 나온 미르지요예프는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를 교체하기 시작하였다. 내무부 장관이었던 압둘살롬 아지조프(Abdusalom Azizov)는 2017년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호레즘 지방의 주지사였던 폴랏 보보조노프(Polat Bobojonov)가 내무부 장관직에 임명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르지요예프는 부패 척결이라는 정치 개혁 하에서 주요 씨족 파벌의 타슈켄트 지역의 경찰서장 및 사마르칸트 지역의 주지사 변경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나왔다. 2018년 1월 31일에는 이노야토프가 국가안보국장 직에서 해임되고, 신임 안보국장에는 2015년 5월부터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던 이흐티요르 압둘라예프(Ikhtiyor Abdulayev)가 임명되었다.⁵⁰⁾ 미르지요예프는 주요 정적 제거에 일등 공신인 자키르 알마토프를 내무부 고문으로 임명하고, 국가안보국의 전권을 내무부로 이전하여, 이노야토프의 권력 기반을 자신에 충성하는 세력에게 이양하였다.⁵¹⁾

한편, 미르지요예프는 중앙 주요 부처에서의 타슈켄트 파벌 출신 정적들을 위와 같이 제거하여 그 영향력을 축소하였다면, 타슈켄트 파벌의 근거지이자 수도인 타슈켄트에서의 씨족 파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그는 2017년 8월 27일 타슈켄트 시의 지방 의회에 대한 선거(On elections to district Councils of People's deputies of the city of Tashkent)법을 제정하여, 수도인 타슈켄트 시에서의 지방 의회 대표단(Local Kengashes of people's deputies)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미르지요예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도 타슈켄트의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2017년 타슈켄트 시 지방 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라 밝혔으며,⁵²⁾ 2019년 지방 선거에 적용되었다. 지방 의회 선거 실시에 관한 개혁안은 외견적으로는 지방을 관할하는 주지사를 견제하는 지방자치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⁵³⁾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방 의회 선거를 통해 수도 타슈켄트의 주지사를 견제하고 책임성을 묻는 한편, 타슈켄트 파벌출신 엘리트들을 지방 의회라는 국가 제도 속에서 통제하기 위함의 목적으로 해당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한 것이다.

미르지요예프 정권 초기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집권자 미르지요예프는 정치적 우위에 있던 타슈켄트 파벌과의 협력 및 주요 씨족 파벌의 합의를 통해 대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대권을 잡음과 동시에 협력자였던 타슈켄트 파벌 출신의 정적들을 경제 및 정치 개혁이라는 국가 의제를 통해 중앙 주요 부처에서 빠르게 제거하는 한편, 타슈켄트 파벌의 근거지인 타슈켄트에서의 씨족 파벌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 수립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의 알마토프를 정치권으로 복귀시킴으로써 파벌 간 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권력집중화를 일정 부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Power-Sharing)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9(1): 112.

49) AKIpress. “Mirziyoyev to Vice PM Rustam Azimov: "I should have fired you for irresponsibility” https://m.akipress.com/news:593094:Mirziyoyev_to_Vice_PM_Rustam_Azimov_-_I_should_have_fired_you_for_irresponsibility_/ (검색일 : 2021년 5월 1일)

50) Gazeta uz. “Ixtiyor Abdullayev Rustam Inoyatov oʻrniga MXX rahbari lavozimini egalladi.” <https://www.gazeta.uz/oz/2018/01/31/mxx/> (검색일: 2021년 5월 2일)

51) RFERL. “Amid Reform Talk, Zakir Almatov, At Center Of Andijon Bloodshed, Is Back.” <https://www.rferl.org/a/uzbekistan-zakir-almatov-andijon-violence-returnss-to-government/29068297.html> (검색일: 2021년 5월 2일).

52)Uz daily. “Uzbek leader signs law on elections to district Councils of People's Deputies of Tashkent.” <https://www.uzdaily.uz/en/post/40653> (검색일 : 2021년 5월 2일).

53) 2017년 8월 27일 개정된 지방 의회 선거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 1조에 따르면, 지방 의회는 지역구당 1명으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표 5」 2018년 미르지요예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

직급	집권 엘리트	출신 파벌
대통령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사마르칸트
총리	압둘라 아리포브(Abdulla Aripov)	타슈켄트
제1부총리	아칠바이 라마토프(Achilbay Ramatov)	호레즘
부총리	잠시드 쿠즈카로프(Djamshid Kuchkarov)	사마르칸트
부총리	수흐롭 홀무라도프(Suhrob Kholmuradov)	사마르칸트
부총리	노디르 오타조노프(Nodir Otajonov)	페르가나
부총리	알리셰르 술탄노프(Alisher Sultanov)	타슈켄트
부총리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lkhakimov)	타슈켄트
부총리	탄질라 나르바예바(Tanzila Norbaeva)	페르가나
국방부 장관	압둘살롬 아지조프(Abdusalom Azizov)	타슈켄트
재무부 장관	잠시드 쿠즈카로프(Jamshid Kuchkarov)	타슈켄트
내무부 장관	폴랏 보보조노프(Polat Bobojonov)	호레즘
국가안보국장(SNB)	이크티요르 압둘라예프(Ixtiyor Abdullayev)	페르가나

출처 : 2018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조직도(Соста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참고하여 재구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르지요예프는 집권 2년 만에 협력자이자 경쟁자였던 주요 타슈켄트 파벌 인사들을 축출할 수 있었으며, 2018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들의 출신 파벌은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면, 타슈켄트 파벌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었던 2016년에 비해 출신 파벌의 비율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권력독점 단계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1인 독재체제 완성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걸쳐 미르지요예프 정권 하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⁵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르지요예프의 친위여당인 자유민주당이 15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며 여당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정치적 도전 없이 국회의원 선거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르지요예프가 권력집중화를 대부분 완료했음을 말한다. 그는 다시금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의 인사이동을 통해 친 미르지요예프 인사들로 정부를 재편하였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주요 정부 인사이동은 2021년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르지요예프의 재선과도 매우 유관하다. 임기 초반, 미르지요예프는 경제 성장과 정치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하는 한편 정치 개혁 하 부패척결이라는 명목으로 주요 정적들을 제거하여 권력집중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 성장이 어려운 환경 및 아직 보건 인프라가 미진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입법부 내 자신의 포지션을 확실히 하고, 정부 집권엘리트들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친 미르지요예프 인사들로 구성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54)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원 선거는 결선투표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9년 12월과 2021년 1월에 걸쳐 선거가 이루어졌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불공정,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정당만이 선거에 입후보자를 출마시킬 수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바,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거에 입후보시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친정부성향 정당의 구성원이 아닌 이상 출마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다당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창설하여 직접적인 후원-수혜관계를 형성해온 친위정당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cy Party)이 오랫동안 의회의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다. 입법부 내에서 씨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지방정치세력의 영향력은 대개 축소된 한편,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후원-수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집권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 왔기에, 입법부 운영 및 구성은 선거에 의해서가 아닌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2021년 미르지요예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

직급	집권 엘리트	출신 파벌
대통령	샤브캣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사마르칸트
총리	압둘라 아리포브(Abdulla Aripov)	타슈켄트
제1부총리	아칠바이 라마토프(Achilbay Ramatov)	호레즘
부총리	잠시드 쿠츠키카로프(Djamshid Kuchkarov)	사마르칸트
부총리	슈라합 가니예브(Shuhrat Ganiyev)	페르가나
부총리	사르도르 우무르자코브(Sardor Umurzakov)	타슈켄트
부총리	벡존 무사예브(Bekhzod Musayev)	타슈켄트
부총리	아지즈 압두하키모프(Aziz Abdukhakimov)	타슈켄트
국방부 장관	바코디르 쿠르바노프(Bakhodir Kurbanov)	지작
재무부 장관	티무르 이쉬메토프(Timur Ishmetov)	타슈켄트
내무부 장관	폴랏 보보조노프(Polat Bobojonov)	호레즘
국가안보국장(SNB)	압둘살롬 아지조프(Abdusalom Azizov)	타슈켄트

출처 : 2021년 우즈베키스탄 정부조직도(Состав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참고하여 재구성.

특히, 이노야토프를 해임한 후, 새로이 부임시킨 국가안보국장 이크티요르 압둘라예프(Ikhtiyor Abdullayev)는 2019년 2월 대통령의 휴대전화 도청 및 가족 사찰을 했다는 혐의가 밝혀졌었다.⁵⁵⁾ 미르지요예프는 이노야토프 해임 이후 국내 정치에 영향력이 큰 기관이었던 국가안보국 대부분의 전권을 내무부로 이전하였으나, 여전히 국가안보국은 국내의 권력이 집중되는 기관 중 하나였다. 이러한 국가안보국에서의 대통령 사찰은 큰 이슈로 부상하였고, 미르지요예프는 자신의 총신인 압둘살롬 아지조프(Abdusalom Azizov)를 국가안보국장직에 임명하였다.⁵⁶⁾ 2019년 9월 압둘라예프는 우즈베키스탄 군사법원에 의해 범죄 조직 및 뇌물 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⁵⁷⁾

[표 6] 2021년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의 출신 파벌을 보면, 2016년 미르지요예프 권한 대행 시절에는 타슈켄트 출신 파벌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다양한 씨족 파벌 출신이 분포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교체된 집권엘리트는 부총리직의 슈라합 가니예브(Shuhrat Ganiyev), 사르도르 우무르자코브(Sardor Umurzakov), 벡존 무사예브(Bekhzod Musayev), 국방부 장관직의 바코디르 쿠르바노프(Bakhodir Kurbanov)가 재무부 장관직의 티무르 이쉬메토프(Timur Ishmetov)이다. 국방부 장관 바코디르 쿠르바노프는 전 국방부 장관인 아지조프가 안보국장직을 맡게 되며 임명된 사례이다. 이 외 교체 인사들인 부총리직의 사르도르 우무르자코브, 벡존 무사예브와 재무부장관 티무르 이쉬메토프는 모두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 및 경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들이다. 이는 미르지요예프가 권력집중화를 완료하여 정권의 안정성을 구축하고 난 후부터는 2021년 대선을 대비하여 정권의 국정과제였던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개편을 시도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미르지요예프 정권 하에서의 집권자-씨족 파벌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 권력공유 구조

55) Eurasianet. "Uzbekistan: Head of security services gets chop amid talk of surveillance." <https://eurasianet.org/uzbekistan-head-of-security-services-gets-chop-amid-talk-of-surveillance> (검색일: 2021년 5월 4일).

56) The tashkent times. "Abdusalom Azizov replaces Ikhtiyor Abdullaev as State Security Service chief" <https://tashkenttimes.uz/national/3511-abdusalom-azizov-replaces-ikhtiyor-abdullayev-as-state-security-service-chief> (검색일: 2021년 5월 4일).

57) gazetauz. "DXXning sobiq raisi Ikhtiyor Abdullayev 18 yilga qamaldi." <https://www.gazeta.uz/oz/2019/09/27/court-decision/> (검색일: 2021년 5월 4일).

는 집권 초기 타슈켄트 파벌과의 협력 및 주요 씨족 파벌 간의 합의를 도모하여 자신이 집권자로 부상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 빠르게 주요 정적이자 한때 협력자였던 타슈켄트 파벌 인사인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정치권에서 축출하여 권력전형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선거 운동 당시, 카리모프 정권을 계승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과는 반대로 정치 개혁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자유화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며, 주요 정적들을 정치개혁 하 부정·부패 척결 혹은 경제성장 실패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명목으로 제거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먼저, 부총리이자 재무부장관이었던 아지모프를 경제성장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론화하여 축출한 후, 라이벌 파벌 출신이었으나 미르지요예프 킹메이커 역할을 한 이노야토프를 인권유린, 부정·부패 등의 명목으로 제거하며 정적들에 대한 권력 통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축출하는 한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씨족 파벌들의 실세라 할 수 있는 각 지방 주지사를 교체함으로써 정권 수립에 협력했던 엘리트들을 대거 축출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권력독점화를 완성하여 확립된 독재로 이행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5. 결론

독립으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대통령 이상으로 국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씨족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엘리트들의 영향력은 대거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씨족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우즈베키스탄 내부 정치 동학에 주요한 변수로 작동하며 국가 전반에 산재해있기에 집권자는 씨족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이니 씨클로부터의 도전에 정권 전복 가능성이 있는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체제 안정성이 집권자 1인의 집권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 집권엘리트와의 권력 공유 및 통제를 통해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집권자가 집권엘리트와의 권력공유에 있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가는 권위주의체제 안정성과 매우 연관하다고 볼 수 있다.

독립 초기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Tashkent), 사마르칸트(Samarkand), 지역을 중심으로 한 씨족 파벌이 국내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다. 90년대 초반 카리모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거대해져 온 씨족 파벌에 근간한 집권엘리트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여 독립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1인에 권력을 집중된 권위주의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협력자였던 사마르칸트 파벌 집권엘리트를 포함한 씨족 파벌에 대한 통제 및 대통령으로의 권력전형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카리모프는 2000년 중후반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집권엘리트를 카리모프 개인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구성하고 집권자를 위협하는 엘리트의 탄생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하였다.

카리모프는 지역에 기반을 둔 씨족 파벌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이는 출신 씨족 파벌과의 협력을 통해 권위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면, 이후 점차적으로 대통령 1인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게끔 정치적 위협이 되는 협력자들을 제거해왔다. 특히 권력의 집중화 과정에서 점차 협력하였던 파벌인 사마르칸트 파벌과의 갈등상황에 봉착하자 라이벌 파벌인 타슈켄트 파벌과의 협력을 통해 두 거대 파벌 간 경쟁을 유발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권력을 중앙집권화 시킴으로써 권력독점화를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집권자는 집권엘리트와의 권력공유에 있어 정권 안정을 위협받는 경쟁자가 아닌 조정자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점차적으로 국가 권력기반 대부분을 대통령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국가기관으로의 중앙 집권화를 일정부분 마무리시켜 중앙 정부에서의 씨족 파벌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킨 한편, 씨족 파벌의 주요 권력기반인 지방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는 주지사들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중앙정부가 모두 관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일부 지역 유지들과 주지사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카리모프는 국가 건설과 법치를 내세우며 부패 혐의로 해임 또는 감옥행을 통해 자신의 권한과 개인 파벌을 형성시켰다. 즉, 지방 주지사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주 교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대통령이 관할하는 중앙정부 하에 예속시켜 집권자의 직할 통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미르지요예프는 집권 이후, 카리모프와 유사하게 주요 집권엘리트들을 교체하며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여 왔다. 카리모프 사망 후, 타슈켄트 파벌 주요 인사 아지모프, 이노야토프와 더불어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된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의 미르지요예프는 씨족 파벌 간 합의 및 타슈켄트 파벌과의 협력을 통해 대통령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권과 동시에 타슈켄트 파벌 주요 인사들을 정치개혁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자유화라는 명목 하에 신속히 축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동향 파벌 출신이자 타슈켄트 파벌 주요 인사의 정적을 정치권으로 영입, 정치적 도전 없이 대통령으로의 권력전횡과 집권엘리트 권력 통제에 성공하게 된다. 그는 정부 주요 집권엘리트 가운데 정적들을 제거함과 더불어 씨족 파벌들을 영향력을 대폭 축소시키기 위해 각 씨족 파벌의 지역의 주지사를 교체하고, 그들을 상대할 대상으로 지방의회선거를 부활시킴으로써 중앙 및 지방에서의 씨족 파벌 출신 집권엘리트들의 영향력을 점차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하면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두 집권자(카리모프, 미르지요예프) 모두 씨족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와의 권력공유 구조 동학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첫 번째는 주요 씨족 파벌과의 협력을 통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창출,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전횡을 위한 주요 씨족 파벌에 대한 권력 통제 및 축출, 세 번째는 권력독점을 통한 대통령 1인 독재체제 완성이다. 종합하면, 집권 초반 주요 씨족 파벌과의 경쟁적 독재에서 점차적으로 대통령 1인에 의한 확립된 독재로 변화해 온 모습이 공통적인 집권자-집권엘리트 권력공유 동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안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정권 모두에서 대통령은 집권엘리트와의 권력공유에 있어 정권 안정을 위협받는 경쟁자가 아닌 조정자로 변모하며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집권자 1인을 위한, 1인에 의한 권위주의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현재로서는 25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카리모프 정권이 미르지요예프 정권에 비해 경성 권위주의로 평가받고 있으나, 미르지요예프 정권 또한 더욱 경성화 될지, 혹은 연성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연구를 통해 집권 이후 지금까지 미르지요예프는 카리모프 시기에 이루어졌던 집권엘리트와의 권력 공유 및 통제 방식을 유사하게 활용함으로써 정권의 안정과 대통령 1인에 권력을 집중화시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미르지요예프 정권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가에 따라 본 글에서 주장한 씨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집권엘리트 집단에 대한 집권자의 권력 공유 및 통제가 우즈베키스탄 권위주의체제 안정성에 있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더욱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르지요예프가 재선되는지 여부와 만일 재선이 된다면 미르지요예프 2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는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봉구. (2008). “우즈베키스탄 민족국가의 발명? 우즈벡 종족-민족 정체성의 구성요소들.” 『한국정치학회보』 42(3): 415-437.
- 박상남. (2011). “우즈베키스탄 국가 성격- 국가성, 국가능력, 신세습주의.” 『아시아문화연구』 24: 67-89.
- 방일권. (2012). “비공식 제도로서 씨족정치 : 우즈베키스탄의 사례.” 『중소연구』 35(1): 241-269.
- 성동기. (2004). “우즈베키스탄 씨족(Clan)의 순환적 발전행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6: 349-370.
- 성동기. (2012). “우즈베키스탄 정권 안정화 정책 분석 : 유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차세대 엘리트 양성을 중심으로.” 『외국학 연구』 19(0): 259-280.
- 성동기. (2019).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권의 권력 강화 방식 분석.” 『아시아리뷰』 9(1): 101-128.
- 신범식. (2018). “탈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의 국민국가 건설과 이슬람.” 『세계지역연구논총』 36(2): 163-190.
- 엄구호. (2009). “중앙아시아 민주주의와 씨족정치.” 『세계지역연구논총』 27(3): 181-220.
- 윤도원, 백우열. (2019).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권력승계 과정과 체제 안정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59(3): 265-307.
- 이선우. (2016).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부의 이슬람정책: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 『중소연구』 40(3): 269-201.
- 이영형. (201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시스템 구축과 카리모프(I. Karimov) 대통령의 장기집권 : 과정, 결과, 의미.” 『중소연구』 39(2): 261-288.
- 이영형, 김영진. (2015). “러시아 체제전환과 통제되지 않은 자본 - 체제 전환기(1992-1998) 마피아 활동을 중심으로 -.” 『오토피아』 30(1): 237-268.
- 이재영, 김석환, 박상남, 손영훈. (2010).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지은. (2016). “초대대통령 카리모프의 서거와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투르크경제권』 17(2): 1-6.
- 이지은. (2019).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 그리고 권위주의 향방.” 『한국중동학회논총』 40(1): 1-24.
- Adrain Treacher. 1996. Political evolution in post-soviet Central Asia. *Democratization* 3(3): 306-327.
- Ambrosio, T. (2015). Leadership succession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Regime survival after Nazarbayev and Karimov. *Journal of Balkan and Near Eastern Studies*, 17(1): 49-67.
- Bowyer, A. C. (2018). Political reform in Mirziyoyev’s Uzbekistan: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civil societ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5-70.
- Collins, K. (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el, M., & Josua, M. (2018). How authoritarian rulers seek to legitimize repression: framing mass killings in Egypt and Uzbekistan. *Democratization*, 25(5): 882-900.
- Geddes, B. (1991). Paradigms and sand castles in comparativ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Political Science: Looking to the Future*, 2: 45-75.
- Gleason, Gregory. (2002). The Politics of Counterinsurgency in Central Asia, *Problems of Post Communism*, 49(2): 3-14.

- Ilkhamov Alisher. (2007). "Neopatrimonialism, interest groups and patronage networks: the impasses of the governance system in Uzbekistan." *Central Asian Survey*, 26(1): 65-84.
- Kendall-Taylor, A., & Frantz, E. (2016). *When Dictators Die*. Journal of Democracy 27(4): 159-171.
- Khalid, A. (2003). A secular Islam: nation, state, and religion in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35(4): 573-598.
- Koch, N. (2011). Security and gendered national identity in Uzbekistan. *Gender, Place & Culture*, 18(4): 499-518.
- Kubicek. (1998). "Authoritarianism in Central Asia: Curse or cure?" *Third World Quarterly Journal* 19(1):29-43.
- Levitsky, S., & Way, L. A. (2002). Elections without democracy: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13(2): 51-65.
- March, A. F. (2003). State ideology and the legitimation of authoritarianism: The case of post-Soviet Uzbekistan 1. *Journal of Political Ideologies*, 8(2): 209-232.
- Markowitz. (2012). "The sub-national roots of authoritarianism: Neopatrimonialism and territorial administration in Uzbekistan." *Demokratizatsiya The Journal of Post-Soviet Democratization* 20(4): 387-408.
- Melvin. (2000). *Uzbekistan : Transition to Authoritarianism on the Silk Road*. Amsterdam: Harwood Academic Press..
- Naumkin, V. V. (2003). Militant Islam in Central Asia: The Case of the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 Omelicheva, M. Y. (2016). Authoritarian legitimation: assessing discourses of legitimacy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Central Asian Survey*, 35(4): 481-500.
- Peyrouse, S. (2016). Does Islam Challenge the Legitimacy of Uzbekistan's Government?.
- Spechler. (2008).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Central Asia : Uzbekistan under Authoritarianism*. London : Routledge.
- Svolik, M. W. (2009).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477-494.
- Svolik, M. W.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KIpress. "Mirziyoyev to Vice PM Rustam Azimov: "I should have fired you for irresponsibility"" https://m.akipress.com/news:593094:Mirziyoyev_to_Vice_PM_Rustam_Azimov___I_should_have_fired_you_for_irresponsibility_/ (검색일 : 2021년 5월 1일)
- Eurasianet. "Uzbekistan: President Fires Powerful Security Services Chief." <https://eurasianet.org/uzbekistan-president-fires-powerful-security-services-chief> (검색일 : 2021년 5월 1일).
- Eurasianet. "Uzbekistan: Head of security services gets chop amid talk of surveillance." <https://eurasianet.org/uzbekistan-head-of-security-services-gets-chop-amid-talk-of-surveillance> (검색일: 2021년 5월 4일).
- Gazeta uz. "Ixtiyor Abdullayev Rustam Inoyatov o'rniga MXX rahbari lavozimini egalladi." <https://www.gazeta.uz/oz/2018/01/31/mxx/> (검색일: 2021년 5월 2일).
- Gazeta uz. "DXXning sobiq raisi Ixtiyor Abdullayev 18 yilga qamaldi." <https://www.gazeta.uz/oz/2019/09/27/court-decision/> (검색일: 2021년 5월 4일).
- REUTERS. "Exclusive: New Uzbek leader to share power due to clan rivalrie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president-exclusive-idUSKCN12D1ZU> (검

색일: 2021년 4월 30일)

- RFERL. "Analysis: Uzbek Eminence Falls From Grace."
<https://www.rferl.org/a/1057594.html> (검색일:2021년 4월 30일)
- RFERL. "Uzbekistan: Karimov Appears To Have Political Clans Firmly In Hand."
<https://www.rferl.org/a/1070977.html> (검색일 : 2021년 4월 30일)
- RFERL. "How Shavkat Mirziyoev Became Uzbekistan's Supreme Leader."
<https://www.rferl.org/a/uzbekistan-mirziyoev-consolidation-of-power/29016113.html> (검색일 : 2021년 5월 1일).
- RFERL. "Amid Reform Talk, Zakir Almatov, At Center Of Andijon Bloodshed, Is Back."
<https://www.rferl.org/a/uzbekistan-zakir-almatov-andijon-violence-returnss-to-government/29068297.html> (검색일: 2021년 5월 2일).
- Human Right Watch. 2005. "Bullets Were Falling Like Rain-The Andijan Massacre, May 13, 2005"
<https://www.hrw.org/report/2005/06/06/bullets-were-falling-rain/andijan-massacre-may-13-2005> (검색일 : 2021년 4월 30일)
- SOFUZ. "Зокир Алматов ҳукумат ишига қайтарилди"
<https://sof.uz/post/zokir-almatov-hukumat-ishiga-qaytarildi> (검색일 : 2021년 5월 1일).
- The tashkent times."Abdusalom Azizov replaces Ikhtiyor Abdullaev as State Security Service chief."
<https://tashkenttimes.uz/national/3511-abdusalom-azizov-replaces-ikhtiyor-abdullayev-as-state-security-service-chief> (검색일: 2021년 5월 4일).
- Uz daily. "Uzbek leader signs law on elections to district Councils of People's Deputies of Tashkent." <https://www.uzdaily.uz/en/post/40653> (검색일 : 2021년 5월 2일).
- Uzbekistan government website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сообщение о совместном заседани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алаты и Сената Олий Мажлис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https://www.gov.uz/ru/news/view/7246> (검색일: 2021년 05월 01일)

토론문: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가 권위주의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문용일 교수(서울시립대)

제가 토론을 맡은 “우즈베키스탄 씨족 네트워크가 권위주의 체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권력공유 이론(power-sharing theory)을 중심으로”는 아직 관련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 및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고 정책적 함의가 있는 연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권력공유 이론을 이론적 분석틀로 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씨족 네트워크가 체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향후 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질문 및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의 함의를 보다 명확히 한다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논문은 스볼릭의 권력공유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 특히 씨족 네트워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이에 기반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카리모프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경우, ‘집권자로의 권력전횡 및 씨족 파벌 통제’에 있어서 각기 사마르칸트 파벌과 타슈켄트 파벌의 견제와 축출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자신의 씨족이 아닌 타슈켄트 파벌과의 협력과 뒤이은 축출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대통령의 이러한 상이성에 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논문의 제목이 논문의 내용을 과연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논문의 구성과 내용이 과연 핵심설명변수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씨족 네트워크가 우즈베키스탄 체제안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자의 정책결정 등이 씨족 네트워크의 효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3장과 4장의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연구 1 카리모프 시기와 사례연구 2 미르지요예프 시기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보다 더 부각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발표논문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기반한 문헌분석의 방법에 기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이 얘기하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구분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발표논문의 핵심주장을 설득력있게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발표논문의 본문은 사회과학연구논문이기보다는 정책보고서 또는 역사학연구논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예컨대, 씨족 네트워크의 활용 및 상호견제가 카리모프 대통령의 정권장악 및 공고화의 주요 동학이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2-3줄의 진술로 그치기보

다는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추적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92년과 2001년 사이 (내각 구성 등에 있어서) 타슈켄트 파벌의 몰락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대두는 단순히 '제도적 개혁'과 '타슈켄트 파벌 응징'이라는 두 단어의 제시 이상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그 원인(why)과 과정(how)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보완된다면, 핵심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박지인 박사(인하대)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장기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논의를 가져오게 하였다.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비율이 약 6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정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다문화가족정책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중점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 대상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장임숙, 2015),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서는 다양한 모임 및 활동의 참여와 함께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참여의 중요성에 따라 우리의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 초기의 결혼이주여성의 참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과 사회적응교육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봉사활동, 시민단체 활동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단체 활동으로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책 참여의 측면에서는 일찍이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결혼이주여성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였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행정자문위원회, 정책간담회, 시정모니터링 등 영주권을 갖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라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는 모국인 친구모임 참여(58.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 모임(37.1%)에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활동(5.2%)이나 정치활동·노동조합 참여 경험(1.0%)이 있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가 모국인 중심의 친교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각종 모임과 활동 참여 경험은 2015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활동이 없다는 응답도 48.5%로 2015년에 비해 14.6%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 과정에서 소외와 좌절을 겪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유형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참여의 유형 중에서도 여가 활동, 봉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김은재, 2018; 신요한·임수원, 2017; 유정숙, 2012), 특히 정치적 참여에 대한 논의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참여라는 광의의 개념과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라는 협의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서는 정치적 영역의 참여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무엇보다 참여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즉, 자신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것이다(김경준·김성수, 1998; 양덕순·강영순, 2008; 이라영·신남수, 2009; McMillan & Chavis, 1986). 선행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사회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이인숙, 2013; 최문형·정문기, 2015; 하병규·권영주, 2015).

공동체의식은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필수적 요소로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공동체의식은 이주한 국가에서 구성원으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문제해결에 참여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요인으로 공동체의식에 주목하여,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경험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의식

1) 공동체의식의 개념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식을 말한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학자들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역성(Nisbet, 1962), 심리적·정서적 유대감(Sarason, 1974; MacMillan & Chavis, 1986; Davidson & Cotter, 1989),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Glynn, 1981; Westheimer & Kahne, 1993; 김광복·남진, 2005), 실천적 의식(정수복, 1995; 이라영·신남수, 2009)이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은 일정한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동체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은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 참여에 이르는 실천적 의식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의식은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충족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적극적인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지인, 2021).

2)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공동체의식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가 다양했던 것처럼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씩 다르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McMillan & Chavis(1986)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자신이 공동체의 일부분이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구성원 의식(Membership),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중요하다고 느끼는 상호영향의식(Influence), 개인이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되는 욕구에 대한 충족의 필요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친밀감으로 표현되는 공유된 정서적 연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로서 설명하였다. McMillan & Chavis의 공동체의식 구성요소는 이후 국내 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확장되게 된다. Unger & Wandersman(1985)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를 사회적 요인(social component), 인지적 요인(cognitive component), 감정적 요인

(affective component)으로 보았고, Tartaglia(2006)은 욕구충족 및 상호영향의식, 장소애착, 사회적 유대로, Peterson et al.(2008)은 욕구충족(Needs of fulfillment), 구성원의식(Group 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정서적 연계(Shared emotional connection)로 보았다. 국내에서는 김경준·김성수(1998)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를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으로 보았고, 김광복·남진(2005)은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연대라고 하였다. 이라영·신남수(2009)는 공동체의식을 귀속의식,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참여의식, 장소 정주성으로 확장시켜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국내외의 대다수의 학자들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공통적으로 충족감,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친밀감을 포함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족감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과 이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기회를 얻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Davidson & Cotter, 1989; Tartaglia, 2006). 또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고, 만족감을 얻는다(Peterson et al., 2008). 즉, 충족감이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받는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속감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김경준·김성수, 1998; Peterson et al., 2008). MacMillan & Chavis(1986)는 소속감을 구성원의식이라고 표현하며, 구성원의식이란 다른 집단과 구별되어 자신과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감정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소속감은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감정과 함께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상호영향의식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중요하다고 느끼며, 서로를 신뢰하여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MacMillan, 1976; Chavis et al., 1986). 상호영향의식의 핵심은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쌍방향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넷째, 친밀감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좋은 연대를 맺고 있다는 감정(Peterson et al., 2008), 걱정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안정감은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복, 2005). 한편, 친밀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나 공동체의 위기상황을 함께 경험한 경우, 구성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이 발전되게 된다.

2. 지역사회참여

1) 지역사회참여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의 개념은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의 광의의 의미와 지역사회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라는 협의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역시 이러한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사회참여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광의의 의미로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모임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 시민의 지역사회참여가 개인적인 친교 활동보다 지역사회의 조직 및 단체 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면, 결혼이주여성의 참여의 경우 지역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괄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황정미 외(2009)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가족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회구성원과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이후 모국에서의 네트워크가 상실되고 이주한 국가에서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구성원들과의 친교 활동은 지역사회참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협의의 개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는 전통적인 정치참여의 영역인 투표 참여를 의미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이다. 민영 외(2012)는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부터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는 시민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거시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이정석·이혜진(2014)은 외국인주민의 정책 참여에 대하여 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김태완·서재관(2015)은 이주민의 정치참여를 좁은 의미의 투표참여에 한정하기보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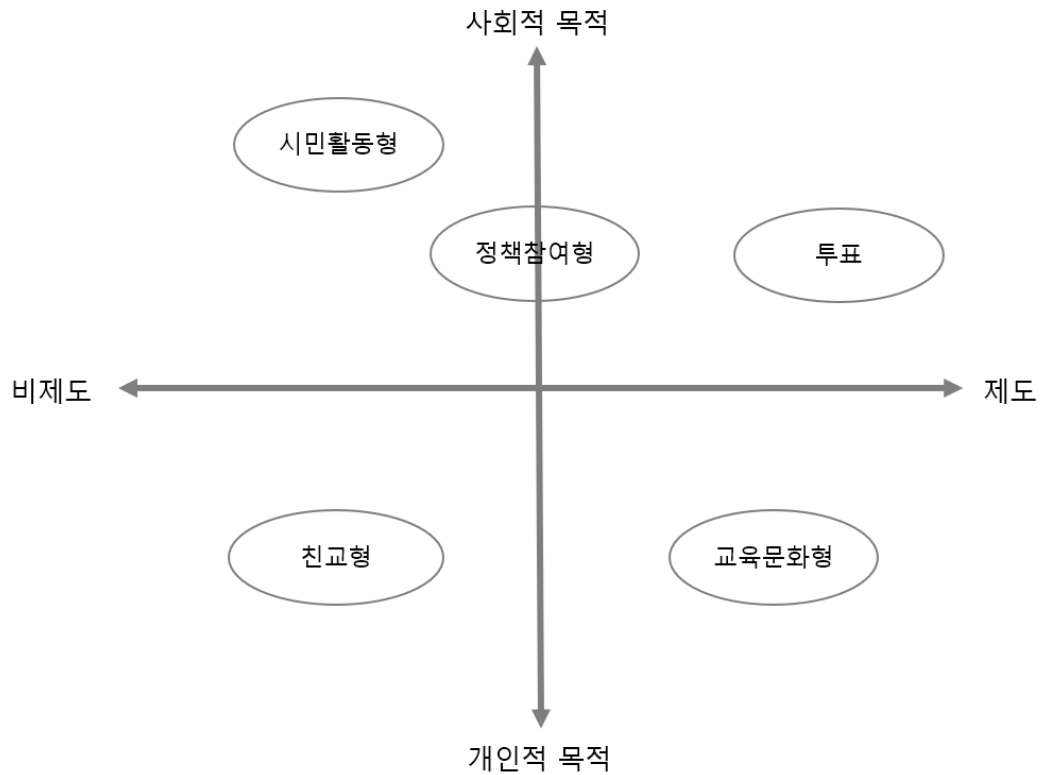
2) 지역사회참여 유형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의 유형은 개별적인 친교 모임, 봉사활동, 제도적 정치참여, 시위나 항의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 행동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Newton & Montero, 2007). 다양한 사회참여의 영역은 생애주기에 걸쳐 점차 사회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는데, 이러한 확장은 이주 이후 이주민의 참여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의 유형은 대체로 다양한 모임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나영(2007)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유형을 친목모임, 취미활동, 종교모임, 교육활동, 봉사활동, 시민단체 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으로 활동내용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정명희(2009)의 경우에도 자조모임 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학습활동, 지역사회 활동, 경제활동, 정치활동으로 구분하였다. 황정미 외(2009)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유형에 문화·교육영역, 경제활동과 함께 자녀교육과 관련한 학부모 모임과 반사회, 부녀회 등 지역사회의 주민활동, 이주민 단체 활동, 지역행사와 축제 참여 등을 포함하였다. 이아민·이채원(2017)은 친교적 모임, 직장모임, 학부모 모임, 교육활동, 여가활동, 종교모임과 함께 다문화가정 모임,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등 이주 관련 모임을 다문화 관련 활동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의 정책참여는 투표에 한정되기보다 지역사회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영 외(2012)는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는 투표를 비롯하여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혹은 후원, 정부나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달, 정치적 사안에 대한 서명, 집회나 시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김태완·서재관(2015)은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나 사회 비판, 정치인·기자와 접촉, 집회나 시위 참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친구 모임이나 계모임, 학부모 친교 모임, 동호회, 종교단체의 소모임과 같은 친교 활동, 경제 및 취업활동, 봉사활동, NGO 및 이주민 지원단체 등 시민단체 활동, 정책참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참여의 유형은 참여 형식에 따라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고, 참여 목적에 따라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참여 형식과 참여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차원과 네 가지 영역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34]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유형

첫째, 친교형 참여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참여이며, 개인의 친밀감 향상이라는 목적을 특징으로 한다. 친교형 참여는 친구 모임, 이웃과의 교류, 학부모 친교 모임, 동호회 모임, 종교 단체 소모임 등 친교 목적을 가진 참여이다. 친교형 참여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향상하고,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교육·문화형 참여는 법규 또는 절차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참여 활동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의 성격을 지닌다.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문화회관, 지역 문화시설 이용 등 지역사회 기관을 통해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확대, 개발되고 있다.

셋째, 시민활동형 참여는 사회변화를 위한 공공의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 봉사활동, 시민단체 활동은 비제도적인 참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중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활동은 제도적인 성격을 가진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활동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경제적 목적만을 가진 일반 직장 취업과는 다른 경제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시민활동형 참여로 포함하여 볼 수 있다.

넷째, 정책참여형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공청회 및 간담회 참여, 행정기관의 민원 제기, 자문위원회, 정책 모니터링,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등 제도적 영역에서의 참여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거나 집회나 시위 참여와 같이 비제도적 영역의 참여를 포함하는 활동이다. 정책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책의 당사자로서 자신과 관련한 정책에 주체적으로 의견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섯째, 투표는 제도적이고 사회적 목적을 가진 참여이다. 「공직선거법」에 서는 영주권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지난 외국인인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주권을 가지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구성원은 공동체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희생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유재원, 2013).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은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Chavis & Wandersman(1990)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동체의식이 향상되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모두 건강한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국일반사회조사(Chinese General Society Survey, CGSS) 자료를 활용하여 공동체의식과 지방 정치참여(투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Xu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양덕순·강영순(2008)은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MacMillan & Chavis(2006)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공동체의식의 네 가지 구성요인들은 모두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그 문제해결에 스스로 나가려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결국 주민참여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박종관, 2012), 공동체구성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이다(Holiday, 2008). 또한 공동체의식은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Talò et al., 2014).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사회참여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사회참여는 또 다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축제를 통하여 주민들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영 외, 2012). 미국 주민 협의회(block association)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공동체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협의회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많은 공동체의식을 보인다는 것이 발견된다. 이는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Long et al., 2007). 또한 스페인 Malaga 도시 거주 이민자들 간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역사회참여, 임파워먼트, 관계, 지지, 소속감, 안전성 등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참여가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도권 지역은 결혼이주여성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심 생활 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경험의 영향관계를 측정하므로, 만약 지역사회참여가 전혀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유의표집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서울 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인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기관을 통해 연결된 결혼이주여성 네트워크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에 이루어졌으며, 구글 설문지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총 218부가 응답으로 제출되었으며 중복된 응답 제출, 모든 문항을 하나의 번호로 응답한 부적합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210부를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인을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10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세~29세	30	14.3
	30세~39세	103	49.0
	40세~49세	55	26.2
	50대~59세	19	9.0
	60세 이상	3	1.4
거주 지역	서울특별시	71	33.8
	인천광역시	98	46.7
	경기도	41	19.5
종교	기독교	47	22.4
	천주교	16	7.6
	불교	29	13.8
	이슬람교	6	2.9
	통일교	10	4.8
	없음	98	46.7
학력	기타	4	1.9
	중졸 이하	15	7.1
	고졸	73	34.8
	전문대졸	32	15.2
	4년제 대졸	75	35.7
혼인 상태	대학원 이상	15	7.1
	배우자와 동거	185	88.1
	배우자와 별거	7	3.3
자녀 여부	배우자와 사별, 이혼	18	8.6
	있음	177	84.3
가정 소득	없음	33	15.7
	100만원 미만	23	11.0
	100~199만원	40	19.0
	200~299만원	55	26.2
	300~399만원	49	23.3
직업 경험	400만원 이상	43	20.5
	일을 하고 있다	103	49.0
	과거에 있다	71	33.8
합계	한 번도 없다	36	17.1
	합계	210	100

먼저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49.0%(10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6.2%(55명) 높았다. 둘째,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인천광역시가 46.7%(96명), 서울특별시 33.8%(71명), 경기도 19.5%(41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를 유의 표집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네트워크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46.7%(98명)로 가장 높았고,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기독교 22.4%(47명), 불교 13.8%(29명), 천주교 7.6%(16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혼인 상태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88.1%(185명)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8.6%(18명),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는 응답이 3.3%(7명)이다. 다섯째, 자녀가 있다는 응답은 84.3%(177명), 자녀가 없다는 응답은 15.7%(33명)에 해당한다. 여섯째, 응답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35.7%(75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34.8%(73명)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 58%로 나타나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가족 월평균 소득은 200~299만원이 55명(26.2%), 300~399만원이 49명(23.3%), 400만원 이상이 43명(20.5%), 100~199만원이 40명(19.0%), 100만원 미만이 23명(11.0%)로 나타났다. 여덟째, 한국에서의 직업 경험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은 49%(103명), 과거에 직업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33.8%(71명), 한 번도 없다는 결혼이주여성은 17.1%(36명)로 나타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직업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주문화적 배경에 따른 응답자의 배경 변인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이주.문화적 특성

N=210

구분		빈도(명)	비율(%)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2	1.0
	1년 이상~5년 미만	41	19.5
	5년 이상~10년 미만	66	31.4
	10년 이상~15년 미만	59	28.1
	15년 이상~20년 미만	21	10.0
	20년 이상	21	10.0
체류 자격	한국 국적	90	42.9
	영주권 취득	59	28.1
	기타	61	29.0
출신 국적	중국	56	26.7
	중국(한국계)	7	3.3
	베트남	81	38.6
	일본	20	9.5
	필리핀	9	4.3
	CIS 국가	13	6.2
	기타	24	11.4
한국어 능력	매우 서툴다	7	3.3
	서툰 편이다	68	32.4
	잘하는 편이다	104	49.5
	매우 잘 한다	31	14.8
합계		210	100

첫째,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31.4%(6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이 28.1%(59명)로 나타났다. 20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0%(21명)에 해당한다. 둘째,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이 42.9%(90명), 영주권을 취득한 응답이 28.1%(59명)로 전체 응답자의 71%가 한국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셋째, 출신국적은 베트남 38.6%(81명), 중국 26.7%(56명), 일본 9.5%(20명), CIS 국가(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¹⁾ 6.2%(13명), 필리핀 4.3%(9명), 기타 11.4%(24명)로 나타났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실력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언어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잘하는 편이다 49.5%(104명), 매우 잘한다 14.8%(31명)로 약 65%의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서툴다를 포함하여 서툴다고 응답한 비율은 35.7%(75명)이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종속변인인 지역사회참여경험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참여의 형식과 목적에 따라 공통적인 지역사회참여 유형으로 친교형, 교육·문화형, 시민활동형, 정책참여형, 투표 참여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참여 문항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친교형, 교육·문화형, 시민활동형, 정책참여형 참여의 응답지는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참여 경험 없음=1, 거의 참여하지 않음=2, 시간 날 때 마다 참여=3, 자주 참여=4'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투표 참여는 '투표하지 않음=1, 투표함=2'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문항별로 투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친교형 .738, 교육·문화형 .847, 시민활동형 .880, 정책참여형 .864, 투표 .898로 모두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인인 공동체의식은 McMillan and Chavis(1986)의 SCI(Sence of Community Index)를 기반으로 Chavis, Lee & Acosta(2008)이 수정·개발한 SCI-2(Sence of Community Index-2)를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충족감,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24개 문항이다. 모두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충족감 .888, 소속감 .870, 상호영향의식 .849, 친밀감 .818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참여에는 일반적으로 연령, 학력, 소득, 건강, 혼인 상태, 교육, 소득, 직업, 자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Fong & Shen, 2016; 양덕순·강영순, 2008; 이해림, 2020). 또한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이주민이 가지는 특성으로 한국에서의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국적 취득 여부 등 이주 관련 변인은 지역사회참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Stoll & Wong, 2007; 양순미, 2011; 이용승·이용재, 2013; 임혁·남일재, 2014).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이주·문화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자

1)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USSR), 소련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11개국이 소련의 소멸과 함께 결성한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 11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공화국으로, 1993년 그루지야가 가입함으로써 12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들 독립 국가 연합의 회원국들은 각각의 독립국으로서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교 활동 또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4475&cid=47323&categoryId=47323>)

녀 여부, 한국 거주기간, 체류자격, 한국어 실력을 최종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 중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응답 내용은 '20대=1, 30대 이상=0'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자녀는 자녀 유무에 대해 선택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응답 내용은 '자녀 있음=1, 자녀 없음=0'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거주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참여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5년 미만=1, 5년 초과=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체류자격은 한국 국적 취득, 영주권 취득, 기타로 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참여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응답지는 '한국 국적 취득=1, 국적 미취득=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 실력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한국어실력에 대해 매우 서툴다, 서툰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로 선택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응답 내용은 '서툴다=1, 잘한다=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과 통제변인을 일괄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연구의 주요 측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공동체의식 전체	2.52	0.48	1.00	4.00
충족감	2.62	0.57	1.00	4.00
소속감	2.36	0.58	1.00	4.00
상호영향의식	2.46	0.55	1.00	4.00
친밀감	2.71	0.49	1.00	4.00
지역사회참여 전체	2.18	0.64	1.00	4.00
친교형 참여	2.40	0.83	1.00	4.00
교육문화형 참여	2.54	0.80	1.00	4.00
시민활동형 참여	2.27	1.01	1.00	4.00
정책참여형 참여	1.87	0.78	1.00	4.00
투표	1.36	0.45	1.00	2.00

독립변수인 공동체의식은 4점 중 M=2.52(SD=0.48)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충족감은 M=2.62(SD=0.57), 소속감은 M=2.36(SD=0.58), 상호영향의식은 M=2.46(SD=0.55), 친밀감은 M=2.71(SD=0.49)로, 공동체의식 중 친밀감의 평균이 가장 높고 소속감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지역사회참여는 M=2.18(SD=0.64)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 하위영역인 친교형 참여는 M=2.40(SD=0.83), 교육문화형 참여는 M=2.54(SD=0.80), 시민활동형 참여는

M=2.27(SD=1.01), 정책참여형 참여 M=1.87(SD=0.78), 투표 M=1.36(SD=0.45)로 교육문화형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1) 공동체의식이 친교형 참여에 미치는 영향

친교형 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공동체의식이 친교형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베타			
독립 변수	충족감	.090	.141	.062	.637	2.300
	소속감	.155	.167	.109	.929	3.354
	상호영향의식	.257	.168	.171	1.530	3.061
	친밀감	-.328	.164	-.193	-2.001*	2.266
통제 변수	연령 (ref.20대)	.198	.182	.084	1.090	1.447
	자녀 (ref.자녀 있음)	.125	.163	.055	.770	1.259
	거주기간 (ref.5년 미만)	-.669	.161	-.327	-4.151***	1.514
	국적 취득 (ref.국적 있음)	-.023	.119	-.014	-.191	1.240
	한국어실력 (ref.서툴다)	-.146	.119	-.085	-1.231	1.159

F=4.975(p<.001), R²=.183, 수정된 R²=.146,
Durbin-Watson=1.924

*p< .05, ***p< .001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97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8.3%(수정된 R제곱은 14.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밀감은 친교형 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01, p<.05).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친밀감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이웃과의 교류, 동호회 모임, 종교 모임, 학부모 모임 등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친교 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친밀감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는 거주기간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 5년을 초

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 5년 미만인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류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이주 초기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 이외의 지역사회 구성원들과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공동체의식이 교육·문화형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형 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공동체의식이 교육문화형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베타			
독립변수	총족감	-.112	.134	-.079	-.837	2.300
	소속감	.326	.158	.236	2.066*	3.354
	상호영향의식	.083	.159	.057	.525	3.061
	친밀감	-.131	.155	-.079	-.842	2.266
통제변수	연령 (ref.20대)	.042	.172	.018	.242	1.447
	자녀 (ref.자녀 있음)	.345	.154	.157	2.240*	1.259
	거주기간 (ref.5년 미만)	-.537	.152	-.271	-3.524**	1.514
	국적 취득 (ref.국적 있음)	.055	.112	.034	.485	1.240
	한국어실력 (ref.서툴다)	-.117	.112	-.070	-1.044	1.159

F=6.239(p<.001), R²=.219, 수정된 R²=.184,
Durbin-watson=1.680

*p<. 05, **p<. 01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6.23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1.9%(수정된 R제곱은 18.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속감은 교육문화형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66, p<.05). 이는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동, 지역사회의 축제, 문화시설 이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지역사회의 교육·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유대감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연구결과이다(박철.왕산, 2013; 이동주, 2004).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자녀((t=2.240, p<.05)는 정(+의 영향을, 거주기간((t=-3.524, p<.01)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자녀의 지역사회
의 문화시설 이용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결혼
이주여성들이 초기 적응단계를 지나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
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공동체의식이 시민활동형 참여에 미치는 영향

시민활동형 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6>
과 같다.

<표 6> 공동체의식이 시민활동형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베타			
독립 변수	충족감	-.403	.166	-.228	-2.430*	2.300
	구성원의식	.068	.196	.039	.348	3.354
	상호영향의식	.276	.197	.151	1.399	3.061
	정서적 친밀감	.102	.193	.049	.530	2.266
통제 변수	연령 (ref.20대)	.021	.213	.007	.097	1.447
	자녀 (ref.자녀 있음)	.277	.191	.100	1.446	1.259
	거주기간 (ref.5년 미만)	-.573	.189	-.230	-3.029**	1.514
	국적 취득 (ref.국적 있음)	.190	.140	.094	1.360	1.240
	한국어실력 (ref.서툴다)	-.489	.139	-.233	-3.508**	1.159

F=6.893(p<.001), R²=.237, 수정된 R²=.202

Durbin-watson=1.562

*p<.05, **p<.01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6.89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약 23.7%(수정된 R제곱은 20.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족감은 시민활동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t=-2.430, p<.05). 이는 지역사회에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결
혼이주여성이 시민참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참여 활동은 봉사활동,
시민단체 활동,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친교형 참여나 교육.문화형 참여보다 적극적이고 능동
적인 참여의 성격을 지닌다.

보통 개인이 가지는 욕구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충족하게 되므로(Mcmillan &
Chavis), 충족감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이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는 거주기간($t=-3.029, p<.01$)과 한국어실력($t=-3.508, p<.01$)이 시민활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주기간 5년을 초과한 초기 적응 기간을 지난 결혼이주여성들이 시민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잘한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시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공동체의식이 정책참여형 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책참여형 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공동체의식이 정책참여형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베타			
독립변수	충족감	-.152	.134	-.111	-1.138	2.300
	소속감	.344	.158	.257	2.179*	3.354
	상호영향의식	.215	.159	.152	1.352	3.061
	친밀감	-.248	.155	-.155	-1.597	2.266
통제변수	연령 (ref.20대)	-.007	.172	-.003	-.044	1.447
	자녀 (ref.자녀 있음)	-.113	.154	-.053	-.734	1.259
	거주기간 (ref.5년 미만)	-.406	.152	-.211	-2.666**	1.514
	국적 취득 (ref.국적 있음)	-.060	.113	-.038	-.535	1.240
	한국어실력 (ref.서툴다)	-.284	.112	-.175	-2.531*	1.159

F=4.578($p<.001$), $R^2=.171$, 수정된 $R^2=.134$,
Durbin-watson=1.730

* $p< .05$, ** $p< .01$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578,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7.1%(수정된 R제곱은 13.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속감은 정책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t=2.179, p<.05$). 이는 자신이 지역사회 구성원이라고 느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 참여, 공청회 참여, 서명 참여 등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구성원 자격을 위한 활동으로 집단 내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이며(MacMillan, 1976), 정책 참여 활동을 통해 구성원으로서 지위가 견고해진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통제변수의 경우에는 거주기간($t=-2.666, p<.01$)과 한국어실력($t=-2.531, p<.05$)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거주기간 5년을 초과한 결혼이주여성과 본인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책참여형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공동체의식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

투표 참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공동체의식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공동체의식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VIF	
	B	표준오차	베타			
독립변수	총족감	-.094	.093	-.119	-1.010	2.300
	소속감	-.039	.110	-.051	-.360	3.354
	상호영향의식	.204	.110	.252	1.857	3.061
	친밀감	-.208	.108	-.226	-1.938	2.266
통제변수	연령 (ref.20대)	.165	.119	.129	1.384	1.447
	자녀 (ref.자녀 있음)	.033	.107	.027	.306	1.259
	거주기간 (ref.5년 미만)	.087	.106	.078	.819	1.514
	국적 취득 (ref.국적 있음)	-.317	.078	-.352	-4.068***	1.240
	한국어실력 (ref.서툴다)	.123	.078	.132	1.583	1.159

F=4.652(p<.001), R²=.252, 수정된 R²=.198,

Durbin-watson=1.785

***p< .001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652,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5.2%(수정된 R제곱은 19.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표에는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인 총족감,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친밀감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인의 경우 국적취득 여부가($t=-4.068, p<.001$)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선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연구 결과,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유형 일부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인 중 충족감은 시민활동형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충족감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시민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족감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이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지역사회의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바라는 자신의 욕구를 직접 충족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속감은 교육·문화형 참여와 정책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감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유대감을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신이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책에 대한 의견 참여, 공청회 참여, 서명 참여 등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친밀감은 친교형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밀감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이 이웃과의 모임, 동호회 모임, 학부모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으로, 친교 활동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친밀감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낮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친교형 참여를 통해 친밀감이 생성되면 이는 향후 다른 유형의 지역사회참여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통제변수의 경우 먼저 거주 기간은 한국 사회에서 5년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투표를 제외한 친교형, 교육·문화형, 시민활동형, 정책참여형 참여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및 해외의 이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교육·문화형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는 지역사회 기관을 통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성격이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능력의 경우 주관적으로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시민활동과 정책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언어능력이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투표에서는 국적 취득자보다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주권자와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사회참여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의식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중 친밀감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친밀감 형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교형 모임이 주로 모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지역의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결혼이주성과 관련한 네트워

크에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분리된다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으로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과 선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브릿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공동체의식 중 소속감은 교육·문화형 참여와 정책참여형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소속감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여 자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은 시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고 시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출신 지역의 정치체제와 문화가 한국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이주 이후 정치적 영역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민교육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정치체제, 선거제도,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방법 등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문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취업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시민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 중 충족감이 시민활동형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시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여성의 필요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사회에서 친교형 참여나 교육·문화형 참여에 참여하고 있으나, 정책참여는 4점을 만점으로 1.87점으로 매우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예 홍보대사, 자문위원, 정책 모니터링단,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책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이러한 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이 자문 또는 제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요구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지는 다양한 유형의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민들이 위원 위촉 비율이 확대되고 이주민만으로 구성된 대표자회의가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정책의 당사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이 정책형성과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필요가 충족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의 영향관계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지역의 공간적 한계이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때문에 전국적인 지역으로의 논의의 확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여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2020년 사이의 지역사회참여 활동 경험과 공동체의식을 물어본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공동체의식과 거주기간에 따른 현재의 공동체의식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민의 공동체의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의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식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참여에 있어 보다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고상두(2014), “지방정부 수준의 외국인 이주민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1호, pp.167-193.
- 권금상(2011),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참여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주여성의 참여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김경준.김성수(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3권 제2호, pp.211-232.
- 김광복.남진(2005), “주택재개발아파트의 단지배치특성에 따른 임대주택거주자의 커뮤니티의식 분석.” 『국토계획』, 제40권 제7호, pp.73-86.
- 김나영(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민무숙(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원.
- 김태완.서재권(2015),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참여”,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4호, pp.203-240.
- 김혜정(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pp.213-240.
- 민영 외(2012), “연구논문 : 이주민의 정치사회화: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심리적 성향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제37권, pp.139-172.
- 박지인(2021),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경희(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41권, pp.33-54.
- 성희자.전보경(2006), “농촌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7호, pp.149-170.
- 송샘.이재묵(2018), “다문화사회 이주민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아태연구』, 제25권 제1호, pp.61-91.
- 양덕순.강영순(2008),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pp.71-89.
- 양순미(201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공동체 의식 특성과 변인들의 효과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제18권 제3호, pp.385-408.
- (2014),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제21권 제4호, pp.1061-1091.
- 여성가족부(201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오태곤(2018), “결혼이주여성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법사회학적 기초 연구-정치참여변수 간의 관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9권 제6호, pp.711-722.
- 이규영.김경미(2009),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정치참여”, 『유럽연구』, 제27권 제2호, pp.1-24.
- 이라영.신남수(2009),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계획계』, 제25권 제3호, pp.223-234.
- 이성순(2018),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방안 연구”, 『신학과 현장』, 제28집, pp.153-173.
- 이아민.이채원(2017), “지역사회참여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55호, pp.237-264.
- 이용승.이용재(2013), “이주민 정치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

- 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통권 제53호, pp.110-129.
- 이형하(2012),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의미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pp.143-155.
- 이혜림(202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제29권 제1호, pp.119-154.
- 임혁·남일재(2014), “결혼이주여성의 정치참여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5호, pp.43-65.
- 장임숙(2015),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 외국인주민 의사 수렴하고 반영 위해 효과적인 정책과정 참여방안 마련해야”, 『부산발전포럼』, 제152호, pp.52-61.
- 정기선 외(2012),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법무부.
- 정상우(2016), “다문화사회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pp.375-404.
- 정상우·최보선(2013),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헌법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법교육연구』, 제8권 제3호, pp.115-141.
- 최문형·정문기(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49권 제2호, pp.273~306.
- 황정미 외(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III: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참여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Amit, K., & Bar-leiv, S. (2015), “Immigrants’ sense of belonging to the host country: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language proficiency, and religious motiv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24 (3), pp.947-961.
- Bathum, M. E., & Baumann, L. C. (2007), “A sense of community among immigrant Latinas”, 『Family & Community Health』, Vol. 30(3), pp.167-177.
- Chavis, D. M., Lee, K. S., & Acosta, J. D. (2008, June), “The Sense of Community (SCI) revis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I-2”, Paper presented at the 2nd International Community Psychology Conference, Lisboa
- Couton, P. & Gaudet, S. (2008), “Rethinking Social Participation: The Case of Immigrants in Canada”, 『Migration & Integration』, Vol.9, pp.21-44.
- Long, D. A & Perkins, D. D. (2007), “Community social and place predictors of sense of community: A multilevel and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35(5), pp.563-581.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1), pp.6-23.
- McMillan, D.W. (1996),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4(4), pp.315-325.
- Peterson, N. A., Speer, P. W. & Hughey, J. (2008), “Community organizations and sense of community: further development in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36(6), pp.798-813.
- Sonn, C. C. (2002). “Immigrant adaptation: Understanding the process through sense of community”. In A. T. Fisher, C. C. Sonn, & B. J. Bishop (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 205-222). New York, N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Talòl, C., Mannarini, T. & Rochira, A. (2014),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 meta-analytic review”,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7(1), pp.1-28.

Zhang, J., Yu, N/ X., Zhang, J., & Zhou, M. (2017),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older adults: Moderating roles of personal and partner resili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45(5), pp.577-586.

토론문: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참여

안진숙 교수(한양사이버대)

1. 연구 개요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의 정착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무엇보다 참여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의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신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토론 주제

1)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의 명확화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바라본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의 여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수의 경우 자국의 빈곤을 벗어나 새로운 삶과 인생을 향해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들을 사회적 배려나 시혜의 대상, 혹은 우리 사회에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가진 사회적 욕구를 편협하게 해석하여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단순화하여 취업이나 문화 적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편적인 해결책이나 지원만을 제한적으로 제시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고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단순한 정착 수준의 문제 해소 차원의 사회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의 세분화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그들의 사회참여욕구를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기존과 다르게 다양한 유형과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아 기존의 결혼이주여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한국 사회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진 사회적 욕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처럼 지역사회참여의 다양한 참여 형태와 욕구를 결합하여 광범위한 욕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지역사회참여의 대안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교류 기회의 확대와 지역 사회 내 시민교육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진 다양한 이주 변인들이 반영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각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여건에 따라 그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내 욕구가 다양화·세분화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의 다양한 욕구들이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실천적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수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근거로 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참여의 확대를 위해 현재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결혼이주여성 공동체를 활용한 실천적 대안 연구, 지역사회 내 다문화실천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 결론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의 중요성과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참여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를 장기적으로 보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요구 분석,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및 다문화 실천가 역량 강화 등의 세분화된 전문 연구를 확대하는 것을 통해 이주자 공동체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다문화 정책 개발로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본다.

언택트 시대,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표 개발

이민솔 원생(인하대)

I. 서론

2019년 12월, 코로나19의 출현으로 기존의 삶 속에서 누리던 모든 가치와 방식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¹⁾가 기원전(BC)과 기원후(AD)라는 기존의 시대구분에 견줄 만한 Before Corna(BC)와 After Corna(AC)라는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생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오동주·황홍섭, 2020).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코로나19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처음 맞는 학교의 개학시기인 2020년 3월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개학을 미루며 학습환경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높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며, 이제는 코로나19의 시대에서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생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언택트(untact)나 온택트(ontact), 비대면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촉진을 가속화하며 수준이 다른 과학혁명과 정보통신사회로 이끌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원격 근무, 온라인 여가나 쇼핑 등 세대나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기준과 가치에 따라 생활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박선영, 2020). 2020년 봄, 코로나19 확산세로 유래 없는 전국 학교 휴업이 있었지만, 휴업 기간 중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초·중·고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온라인 학급방 등 학습지원, 대학의 재택수업 등이 이루어졌다. 혼란한 시기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보호와 교육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과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높은 수준의 정보 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하는 온라인 및 비대면 교육 사례들은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 4. 27.).

청소년은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인터넷 게임이나 SNS 커뮤니케이션 등 온라인 활동에 익숙하였고, 언택트 시대에 들어서서는 교육과 학습, 여가 등 일상생활 대부분의 활동을 온라인에 맡기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어떤 세대보다 쉽고 빠르게 온라인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였을 때, '온라인 활동'에 대한 파급력은 지금까지의 영향력보다 훨씬 클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언택트 시대의 환경 속에

1) 2019년 12월 처음 보고된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감염병 명명 지침에 따라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발표한 공식 명칭은 Coronavirus disease-20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 줄임말은 COVID-19(코로나19)이다. COVID-19에서 'CO'는 '코로나'를 나타내며 'VI'는 '바이러스', 'D'는 감염증을 나타낸다(출처: CDC, FAQ Coronavirus Disease 2019 Basics: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한글표현인 '코로나19'를 사용한다.

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에 주목하려고 한다. 그동안은 게임이나 SNS 사용과 같은 여가 활동을 위주로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공교육은 물론이고 교과교육이 아닌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 등도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동안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 역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 학습 방향이나 다양한 돌봄 및 보호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언택트 그리고 온택트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기획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전에 기본적인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에 일찍부터 노출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의 단순히 연구 대상을 성인에서 청소년으로 바꾸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곽주은·김병수, 2017). 더욱이 온라인 교육을 보조수단으로 여겼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 청소년의 학습 동기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다면 학력저하 또는 성취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청소년 스스로 지녀야 한다(오동주·황홍섭, 2020; 이영란·류정민·한기순, 2020). 또한 그동안은 온라인 게임, SNS, 인스턴트 메시지 등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 학교나 학원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을 통해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전대성, 2020).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활동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더 늦기 전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성장과정 속에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이주배경 청소년²⁾들에게 활발해지는 온라인 활동은 기회의 부여이자 동시에 박탈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순혈주의, 민족주의 전통이 있는 사회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른 외모, 문화적 차이 등으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모상현, 2018; 이민솔·박성철, 2021). 하지만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현상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그동안 비주류로서 겪어야 했던 편견과 차별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와 같은 시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인 부모님을 둔 청소년보다 외국어가 능숙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 이는 국경으로 구분할 수 없는 온라인상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와 반대로 언택트 시대가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주배경 및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갖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에 취약하며 학습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UN, 2020), 이러한 불이익은 단순히 학업성취도뿐만이 아닌 이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Fegert, Vitiello, Plener & Clemens, 2020; Magson, Freeman, Rapee, Richardson, Oar & Fardouly,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명확히 개념과 유형을 정의를 하고, 활동을 범주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실현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범주화한 지표를 제시한다. 청소년들의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혼란한 시기에, 정서적·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이중고를 겪고 있을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지표가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2)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다문화’의 용어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족으로 의미를 제한하며, 나아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혼혈을 대체하여 결국 낙인화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에 동의하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만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정의한다. 여기서 ‘이주’란 외국뿐 아니라 북한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이주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논의의 필요성: 언택트시대,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의미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언택트 이전 시대에 연구되어 온 이주배경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체육활동 경험이나 신체활동 참여 행태에 따른 영향 분석과 같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신체 활동을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김동환·김동학, 2016; 이승범·조원제, 2017). 또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활동이 학교 생활적응 혹은 활동역량증진의 효과성에 미치는 결과를 보는 등,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연구(오영훈·임한나, 2014; 조민구·최진이, 2013; 조혜영·김경임, 2018)와 여가활동이 인간관계나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윤영, 2019; 하윤주·김은아, 2019)가 있다. 주로 신체활동, 대인관계활동, 여가활동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주배경 청소년은 가정환경에서의 문화적,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해 부모의 무관심한 양육태도나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되는데(김명숙·이미현, 2019; 황선영·노병일, 2015),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체, 대인관계, 여가에 집중하여 활발히 논의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연구 분야가 협소하고, 학교적응이나 진로 등을 논의하면서 개인의 정서나 역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환경이 더욱 강화되었다. 온라인 활동의 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도 큰 기회가 되는데, 우선 가정과 학교 혹은 지역사회로 한정되었던 사회연결망이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제한 없이 넓어질 수 있다(곽주은·김병수, 2017). 또한 온라인상의 익명적 환경에서는 본인 의지 없이 이주배경의 상황이나 외적 모습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차별에서 해방되어 한 명의 청소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동질성과 공감 경험 형성은 대인관계에서 상호간 신뢰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윤수진·손동영, 2014). 정체성에 혼란과 위축을 느낄 가능성이 큰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은 자아존중 경험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익히며, 나아가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이제는 온라인 활동이 여가나 사교육의 도구라는 틀에서 벗어나 청소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청소년 활동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상으로 확대 및 이동이 되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에 주목하며, 청소년기에 갖춰야할 태도와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균형 있는 온라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온라인 활동에 필요한 역량 논의

1) 디지털 시민성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후 국내에서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10년 중반, 인공지능과 지능정보가 강조되며 이루어졌다. 2010년 중반 이전까지는 일상화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여 정보와 지식을 얻고, 타인과 소통을 하는 것이 디지털 시민의 주된 역할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은 우리 삶 곳곳을 '디지털화'시켰고,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소양과 권리, 책임, 공동체 의식이 디지털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생활에 디지털을 들여놓는 것과 디지털 안으로 생활을 옮기는 것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안정임 외(2013)는 참여성, 관용성, 공공성으로 명명하였지만 구성 요소의 세부 문항에서는 참여, 소통, 윤리의 개념이 구분 없이 모두 녹아져 있다. 최문선과 박형준(2015)은 성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치참여에 대해 비중을 두었고, 김민정과 최동연(2017)은 청소년 대상 척도 개발을 위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임영식과 정경은(2019)은 실천적 태도를 강조하는 에티켓이나 대처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준 외(2020)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척도이기에 모든 영역에서 보안과 합법 같은 윤리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이 윤리적 태도에 중점을 두다가 점점 윤리개념과 더불어 행동적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해지는 디지털 환경의 영향으로 디지털 도구에 대한 유창성이나 사이버폭력 대처, 디지털 보안 등 구성 요소의 영역도 세분화되고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

연구자	연구 대상	디지털 시민성 구성 요소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3)	청소년	참여성, 관용성, 공공성
최문선·박형준(2015)	대학생	인터넷 정치 참여, 기술적 인터넷 활용 능력, 비판적 관점, 온라인 상 의사소통 및 협업,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
김민정·최동연(2017)	교사	자아 정체성,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디지털 도구에 대한 유창성, 디지털 환경에 대한 윤리
임영식·정경은(2019)	초등학생	디지털 에티켓, 감정인지, 안전과 보안,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저작권, 공감, 온라인 정체성, 사이버폭력 대처
이준·유숙경·이윤옥(2020)	중·고등학생	디지털 환경에서의 에티켓, 디지털 환경에서의 유창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합리적 활동, 디지털 자아정체성, 사회문화적 참여성, 디지털 보안

2) 디지털 역량

디지털 시민성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 중에서 대표적으로 디지털 역량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ICT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 직업(진로), 고용성, 학습, 여가, 포용 그리고 사회참여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평생학습으로 갖춰야할 8가지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소개하였다(Ala-Mutka, 2011;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재인용).

디지털 역량의 구성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최숙영(2018)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에 대해 고찰하였고, 김동만과 이태욱(2019) 그리고 최성연(202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측정을 위해 연구하였다. 비판적 사고와 정보 소양, 디지털 기기의 조작 역량, 정보의 검색·처리·관리 역량, 디지털 콘텐츠 창작 등의 구성 요소를 통해, 디지털 역량은 실천·행동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

연구자	디지털 역량 구성 요소
최숙영(2018)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의사소통과 협력, 비판적 사고와 정보 소양, 컴퓨팅 사고와 문제해결, 창의·융합적 사고와 콘텐츠 창작
김동만·이태욱(2019)	디지털 기기의 조작 역량, 의사소통 및 협업 역량, 정보의 검색·처리·관리 역량, 문제 해결과 학습 역량, 보안 역량, 디지털 윤리 역량
최성연(2020)	디지털 소양, 정보와 데이터 소양, 디지털 콘텐츠 창작, 사이버 윤리의식

3) 소결

온라인상에서 시민성과 역량의 논의가 오래되지 않았고,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역량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역량의 구성 요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윤리, 의사소통, 참여 등 항상 교집합으로 포함되는 기본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역량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디지털 시민성은 보다 가치, 태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에티켓, 권리, 책임, 법 등 스스로의 보호와 온라인상 타인과 관계에서의 안전은 모든 구성 요소에서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디지털 역량은 능력 중심의 실천과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검색, 학습, 창작 등의 행동 요소에 비중이 높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성 요소의 차이 때문인지, 같은 ‘사회·과학 분야’ 안에서 연구되고 있어도 디지털 시민성은 사회 분야, 디지털 역량은 과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온라인 활동에도 모두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연구자가 구성하는 온라인 활동의 하위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3. 온라인 활동의 선행연구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표를 설계하기 전에, 지금까지 청소년 온라인 활동의 선행연구를 시기별로 나누어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시기는 온라인 활동의 도입기, 확대기, 전환기로 구분하였는데, 도입기는 광역 인터넷이 보편화된 1990년대 중반, 확대기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2000년대 후반, 그리고 전환기는 코로나19의 확산 이후로 보았다.

1) 온라인 활동 도입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과 개인 컴퓨터가 각 가정에 보급되면서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았는데, 청소년들은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게임과 놀이 역시 온라인상에서 즐기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PC방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온라인 활동의 시작으로 문화와 생활 양식에 변화가 온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급속한 변화로 인해 생겨난 온라인 활동의 부작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방향으로 정보를 얻으면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겼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의도적이지 않아도 무지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이것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이성

영·이은경·이영준, 2009). 이와 더불어 온라인 게임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온라인 게임은 중독, 유해 환경 노출(선정성, 사행성), 사이버 폭력 등으로 이어지며 단순히 온라인, 청소년으로 한정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이수진·박중규, 2004; 이춘호, 2009).

이처럼 도입기의 청소년 온라인 활동은 윤리 체계가 세워지기 전에 확산되어 각종 문제들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나 에티켓,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역량이나 시민성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당면하는 문제에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온라인 활동 확대기(2000년대 후반~코로나19 이전)

온라인 활동 확대의 일등공신은 당연 스마트폰 출시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고, 이어 국내에서도 2010년 삼성의 갤럭시가 출시되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변화한 온라인 활동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공간의 확장이다. 스마트폰의 휴대성은 온라인 장의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오프라인의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구분되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상에서 온라인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 확대되고 현재는 그 경계의 구분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둘째는 온라인 장에서의 소통이다. 휴대폰의 주된 기능인 전화와 문자 등 타인과의 의사소통은 스마트폰의 진화와 함께 변모하였다. 1:1 관계에서 1:다수, 커뮤니티 등 소통의 장이 점점 넓어지고, 목적에 따라 SNS, 인스턴트 메시지 등 소통 방법이 다양해졌다(이환수·이나리, 2014; 조남익, 2011). 일방향으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던 것에서 벗어나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녀노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확대로 인해 컴퓨터를 주로 다루던 시기에 강조되었던 ‘(정보)기술 능력’에 대한 필요는 약화되었지만, 계속된 온라인 게임의 부작용과 소통의 활성화로 인한 커뮤니티 문제, 차별과 혐오 표현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더불어, 온라인 장의 익명성과 수평 관계가 사회적 일탈 행위를 조장하거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참여를 이끌며, 도덕성 부재와 과잉 참여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주장도 함께 논의되었다(박기범, 2014).

3) 온라인 활동 전환기(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청소년 활동을 언택트, 온택트, 비대면과 같은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연구가 늘어났다. 언택트 시대에서 청소년 활동의 과제를 모색한 것인데, 최근 운영이 어려운 참여형, 체험형 활동 같은 학교 밖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의 전환이나(박선영, 2020),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할 수 있는 혼합형(블렌디드) 활동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 역시 논의하면서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청소년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하기도 하였다(고필재·김용진·권일남, 2020; 이운주 외, 2020).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처럼 청소년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활동이 예고 없이 축소, 혹은 중단되면서 이어지는 급격한 변화와 비대면 활동에서의 새로운 적응에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이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온라인 활동으로의 이동에 대한 안전한 방향 설정과 전에 없던 획기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Ⅲ.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활동 개념 구조화

1. 개념 구성

2장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소년 활동이 온라인에서 확대되는 것, 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활발해지고 유형과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개념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소집단, 개인 역량 중심, 자율과 주체성 강조의 개념(권일남, 2019)이 온라인 활동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온라인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교육과 학습, 소통과 참여, 여가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5가지(윤리, 소통, 참여, 비판적 사고, 이주정체성)로 범주화하고자 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은 앞서 제시된 유사개념인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역량을 합집합으로 포함하며, 나아가 온라인장과 그 밖의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으로 본다. 디지털 시민성과 디지털 역량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온라인 활동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되고, 확장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1) 윤리

윤리는 디지털이 일상화되면서 가장 처음 제기된 문제이자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인 주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점점 다양해지는 관계와 참여 유형을 볼 때, 앞으로의 온라인 활동에서도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나와 타인의 정보 보안, 익명과 자율의 장에서 지켜야 하는 권리와 책임 의식, 그리고 청소년에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등 나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를 위해 온라인 활동에서 윤리는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2) 소통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수가 많고 그 유형이 다양하다. 정서적·신체적 변화를 겪는 시기의 예민한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시기, 토론하고 갈등을 겪으며 또 이를 해결하고 함께 협동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에게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소통 활동이 해방의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참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올바른 참여를 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에서 가정 다음으로 만나는 환경은 이제 온라인 공간이 된다. 교육과 학습, 여가, 사회 및 정치 참여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4) 비판적 사고

온라인상에서 지식과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오해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면 그 본질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갖추고 논리적·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은 청소년의 인지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5) 이주정체성

정체성이란 자신의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Erikson, 1956).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정체성 형성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은 ‘이주’라는 특징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판단과 미래의 방향 설정 방법이 일반 청소년과는 다를 수 있다. 그동안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이주배경의 환경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새롭게 정체성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상의 범주화한 구성 요소를 표로 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활동 구성 요소



IV.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활동의 측정 도구 개발 모색

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법률과 정부 기관의 공식 정책 자료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단체의 공식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여 지표 설계에 논리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법학, 교육학, 행정학 전공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안면 타당도 검증은 하였다.

지표의 세부 문항은 <표 4>과 같다. 윤리의 6개 문항은 임영식과 정경은(2019)의 디지털 시민성 척도의 문항을 재범주화 하여 사용하였다. 이주정체성 중 1번, 2번, 3번, 6번 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외의 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여 세부 문항을 완성하였다.

<표 4>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활동 지표 세부 문항

구성 요소	번호	문항
윤리	1	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입한다
	2	나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3	나는 온라인의 글이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나는 온라인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5	나는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6	나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소통	1	나는 온라인에서 맺어지는 인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2	온라인에서 사귀는 사람도 깊이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
	3	나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것이 더 좋다
	4	나는 온라인상에서 생기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
	5	온라인에서 소통시 나와 다른 국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온라인에서 토론하는 것이 재미있다
참여	1	온라인 활동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2	나에게 오프라인 활동보다 온라인 활동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3	활발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을 위해 외국어 공부(단어/발음 검색, 번역 등)를 해본 적이 있다
	4	온라인 교육과 학습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다
	5	나는 적절한 시간동안 온라인 여가(게임, SNS 등)를 즐긴다
	6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자주 접하고 찾아보기도 한다
	7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댓글을 다는 등 의견을 표현한다
	8	나는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이다
	9	나의 온라인 활동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	1	온라인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검색하는 것이 쉽다
	2	온라인상의 뉴스나 정보를 함부로 믿지 않는다
	3	온라인상의 정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내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모두 볼 수 있게 작성한다
	6	내가 온라인상에 공유한 생각이나 의견이 관심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이주 정체성	1	온라인상에서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어서 좋다
	2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관심을 갖는다
	3	온라인상에서 외국인 부모님 나라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상한다
	4	온라인상에서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 소식이 생기면 더 관심이 간다
	5	나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외국인 부모님 나라를 더 관심 있게 찾아본다
	6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주배경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7	온라인상에서의 내 모습은 실제 나와 다르지 않다
	8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9	나는 온라인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다

V. 결론

우리가 한창 논의하는 ‘포스트 코로나19’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의 시기가 아닌,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온라인상에서의 비대면 활동은 이제 보조수단이 아닌 주가 되었고,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청소년에게 필요한 온라인 활동의 개념과 기준 지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언택트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온라인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온라인 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범주화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 온라인 활동에 대하여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교육과 학습, 소통과 참여, 여가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윤리, 소통, 참여, 비판적 사고, 이주 정체성으로 구성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더 효과적인 성숙을 이루고, 나아가 언택트 시대에서 앞서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개발된 지표는 전문가 3인의 안면 타당도에 의해 검증이 되었지만,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응답 결과를 확인하여 설계된 지표 문항에 대한 더 정확한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후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연구원(2019). 디지털 시민성 개념 및 교육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 고필재·김용진·권일남(202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 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21-41.
- 곽주은·김병수(2017). 다문화 청소년의 온라인 사회연결망 형성과정과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5(3), 49-78.
- 권일남(2019). 청소년활동의 본질과 이해.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3-23.
- 김동만·이태욱(2019). 대학생을 위한 디지털 역량 검사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저용학회논문지, 24(12), 191-199.
- 김동환·김동학(2016). 다문화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5(5), 225-235.
- 김명숙·이미현(2019). 다문화가정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2(1), 19-34.
- 김민정·최동연(2017).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및 교육에서의 시사점. 한국교육공학회 학술대회발표자료집, 54-54.
- 모상현(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54, 67-93.
- 박기범(2014).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탐색. 한국초등교육, 25(4), 33-46.
- 박선영(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173-194.
- 안정임·서윤경·김성미(201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2), 161-191.
- 연합뉴스(2021. 4. 25.). 미국 교사들, 'K방역' 사례교육에 관심...6천회 다운로드.
- 오동주·황홍섭(2020). COVID-19가 교육에 미친 인식, 행동, 가치 및 태도의 변화 양상. 사회과교육, 59(3), 223-250.
- 오영훈·임한나.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를 통한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국립청소년수련원 활동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1), 143-172.
- 윤수진·손동영(2014). 사회적 익명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공동체 신뢰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31(4), 189-226.
- 이민솔·박성철(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을 조절변수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829-843.
- 이성영·이은경·이영준(2009). 컴퓨터 교과 교육 1 : 문제중심학습 기반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교육 방안.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3(1), 267-269.
- 이수진·박종규(2004). 청소년 온라인게임중독 실태와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97.
- 이승범·조원제(2017).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 행태에 따른 학업 성적, 스트레스 인지, 주관적 행복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1(1), 79-94.
- 이영란·류정민·한기순(2020). 언론 기사를 통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성: 위기 속 '창의성 교육'의 역할. 창의력교육연구, 20(4), 65-85.
- 이윤영(2019).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1), 77-90.
- 이운주·최홍일·변주영·김주영·김다인·홍정윤·이미영(2020). COVID-19가 초래한 비대면(언택트) 시기,

- 청소년활동의 재도약 :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143-171.
- 이준·유숙경·이윤옥(2020).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 요구도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관한 인식 분석. 교원교육, 36(4), 123-144.
- 이춘호(2009).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게임 내 윤리적 사회 환경 마련 제안.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17, 151-157.
- 이환수·이나리(2014).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153-163.
- 임영식·정경은(2019). 청소년 디지털 시민성 척도 개발. 청소년학연구, 26(9), 495-522.
- 전대성(2020). 온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3(2), 1-30.
- 조남익(2011). 청소년기의 페이스북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5), 267-289.
- 조민구·최진이(2013). 대인관계중심 레크리에이션 참여가 다문화청소년의 활동역량증진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0(8), 325-346.
- 조혜영·김경임(2018).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과 의미. 청소년 문화포럼, 54, 261-296.
- 최문선·박형준(2015).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형 디지털 시민성 척도 타당화 연구. 시민교육연구, 47(4), 273-297.
- 최성연(2020). 공과대학 학생들이 인식하는 디지털역량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Brain, Digital, & Learning*, 10(3), 321-332.
- 최숙영(2018).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고찰.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1(5), 25-35.
- 하윤주·김은아. 원예활동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융합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6), 409-41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역량계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선영·노병일(2015). 다문화가족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 51-76.
- Ala-Mutka, K. (2011). Mapping digital competence: Towards a conceptual understanding. Sevilla: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7-60.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 Fegert, J. M., Vitiello, B., Plener, P. L., & Clemens, V.(2020). Challenges and burden of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narrative review to highlight clinical and research needs in the acute phase and the long return to normalit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4, 1-11.
- Magson, N. R., Freeman, J. Y., Rapee, R. M., Richardson, C. E., Oar, E. L., & Fardouly, J.(2021).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rospective changes in adolescent mental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0(1), 44-57.
- United Nations(2020). Policy Brief: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United Nations.

토론문: 언택트 시대, 이주배경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표 개발

허숙 교수(인하대)

2019년 시작된 COVID-19로 인해 2020년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온라인에 기반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온라인 기반 활동은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라고 사료됩니다. 연구를 진행하시는 동안 애쓰신 흔적을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 및 현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에 관한 내용 이외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 분석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온라인 기반 활동에 대한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의와 활동을 범주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은 24세 이하까지 전 연령기를 포함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까지 다양한 한국 내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설문과 분석이 진행된다면 실제적이고 의미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5쪽, 온라인 활동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온라인 활동의 시대별 구분에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주배경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의 시대별 구분에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까지 정리된다면 지표 개발에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에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기준을 어떻게 제안하고자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과 분석이 잘 진행되어 연구자가 바라고 원하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고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